

월간

나라재정

MONTHLY PUBLIC FINANCE INFORMATION

3 2021
Vol. 51



Innovation



한국재정정보원
Korea Public Finance Information Service

CONTENTS

March. 2021

VOL. 51

월간 나라재정

발행처

한국재정정보원

주소

[04637]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0,
메트로타워

전화

02-6273-0500

팩스

02-6312-8959

홈페이지

www.kpfis.or.kr

발행인

김재훈 한국재정정보원장

문의

재정정보분석본부 | 02-6908-8593

제작

(주)케이에스센세이션 | 02-761-0031



04

재정 INSIGHT

- 04 KPFIS 인사이트**
 - 고령화 보고서와 우리나라 장기 재정전망 비교
 - 나원희 재정정보분석본부 부연구위원
- 12 재정칼럼**
 - 애자일(Agile)하게 혁신하기
 - 허은영 서울대학교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
 - 데이터 정책의 새로운 접근방식: 애자일
 - 김인숙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초빙연구위원
- 22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24

재정 NOW

- 24** 숫자로 보는 나라재정
- 30** 「열린재정」을 통해 본 나라살림
 세계잉여금
- 36** 키워드 재정
 학교폭력
- 40** Data for All
 모바일 공무원증과 자기주권 신원증명



42

재정 STORY

- 42** 이달의 재정이야기
 산업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는 애자일(Agile) 안양
- 46** 정부재정통계변천사
 6·25 전시재정: 임시토지소득세와 재정법
- 52** 미술관에 간 경제학자
 프리다 칼로의 예술혼과 남미의 혁명 시대
- 56** 경제철학 이야기
 질서자유주의의 창시자, 발터 오이켄
- 60** 재정 캘린더
- 63** 애독자 코너

고령화 보고서와 우리나라 장기 재정전망 비교



인구 구성의 변화는 앞으로 21세기 사회를 지배할 글로벌 메가트렌드(Megatrend)의 핵심 구성요소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과거에는 폭발적인 '인구 증가'가 문제였다면, 최근에는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 그리고 고령인구의 절대 규모 증가에 따른 '고령화(Population Aging)'가 새로운 위험으로 등장한 지 오래다. 고령사회도 아닌 초고령사회¹의 진입을 앞둔 우리나라는 그 위험의 중앙에 서 있다. 최근 정부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과 전 부처를 망라한 「제3기 인구정책 TF」를 출범하기에 이르렀으며, 미래 재정위험에 대비하고자 「2020~2060년 장기 재정전망」을 발표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고령화로 인한 공적연금, 보건의료, 장기요양, 교육 등 지출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3년마다 고령화 보고서(Ageing Report)²를 발간해 각 국가의 장기적인 재정전망을 발표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고령화로 인한 공공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오랜 기간 고민해온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고령화 보고서와 우리나라 장기 재정전망을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나원희 재정정보분석본부 부연구위원(nwh2019@kpfis.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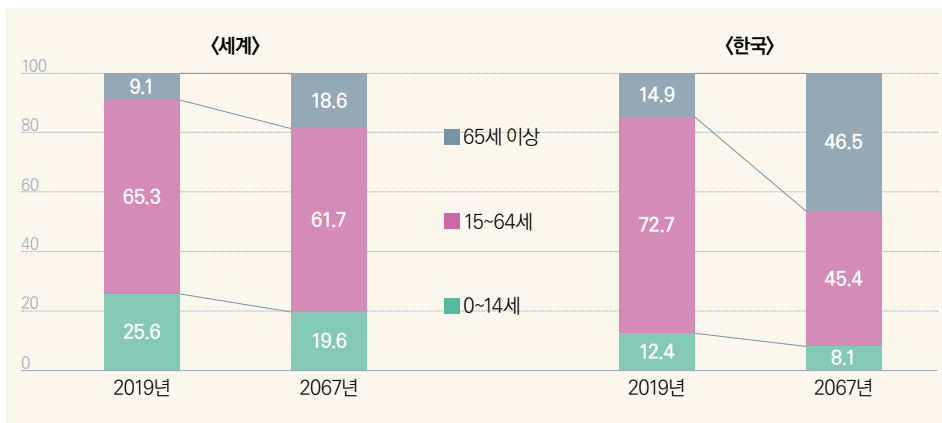
¹ UN 등 국제기구는 노인 비중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구분하였다. 통계청(2020)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5.7%이다.

² 「Ageing Report」는 고령화 관련 장기 재정지출의 대표 보고서이다.

1. 들어가며

현재 우리 사회는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2020년 합계출산율 0.84명으로 '세계 유일 합계출산율 1명 미만' 국가를 기록했다. 또한 2020년부터 베이비붐 1세대인 1955년 생이 노인인구로 편입되어 2025년 고령화율 20%, 고령자 1천만 명이 넘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된다. 즉, 인구 고령화로 인해 인구가 경제성장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인구 오너스기(Demographic Onus)³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유엔(UN)이 2019년 6월에 공표한 세계인구 전망 보고서⁴에 따르면 2019~2067년 기간 중 세계와 한국의 유소년인구(0~14세) 구성비는 각각 6.0%p, 4.3%p 감소하고, 생산가능인구(15~64세)도 각각 3.6%p, 27.3%p 감소할 전망이다. 반면, 고령인구(65세 이상) 구성비는 각각 9.5%p, 31.6%p 증가할 전망이다. 한국의 경우, 유소년인구의 감소(12.4%→8.1%)와 생산가능인구 감소(72.7%→45.4%), 기대수명 증가로 인한 고령인구 증가(31.6%p)는 전 세계 수준과 비교해서도 매우 심각한 인구고령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림 1〉 세계와 한국의 인구구조



자료: UN(2019); 통계청(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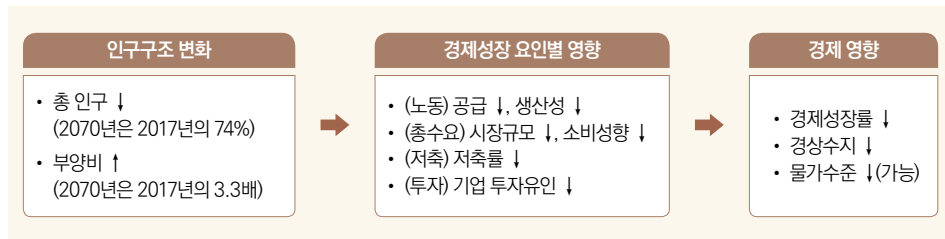
고령화의 가속화는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 및 재정 상황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고령화에 따른 노인진료비 증가, 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보건의료지출 지출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이하 4차 기본계획)의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에서는 3차 기본계획보다 더 빨리 수지 적자(2044년→2042년) 및 기금 소진(2060년→2057년) 시기가 조기에 도래할 것으로 전망했다. 저출산·고령화

³ 인구고령화로 인해 인구가 경제성장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⁴ 2019년 세계인구전망 보고서(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9 Revision) 대상 국가는 전 세계 235개국이다.

로 잠재성장률 둔화와 연금·의료 등 복지지출 급증은 장기 재정여건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므로 미래 재정 위험에 대비해 재정지출의 여력을 확보하고, 재정건전성 악화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림 2〉 인구구조 변화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경로



자료: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2020)

이처럼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와 같은 예상되는 재정 위험요인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한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미국, 영국, 호주, EU 등 주요 선진국 및 경제권에서도 인구고령화가 장기적으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전망하고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는 상태이다(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5). 우리나라도 2006년 「국가재정법」 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2011년 12월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장기 재정전망이 좀 더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국가재정법」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중·장기 재정전망’을 포함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7조제4항에 기획재정부장관은 40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을 대상으로 5년마다 장기 재정전망을 실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보다 앞서 고령화로 인한 공공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고민해온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이하 EC)의 고령화 보고서(「Ageing Report」)와 우리나라의 장기 재정전망 추계에 담긴 고령화 대응에 관해 간략히 비교·분석한다.

2. 유럽연합 고령화 보고서(「Ageing Repo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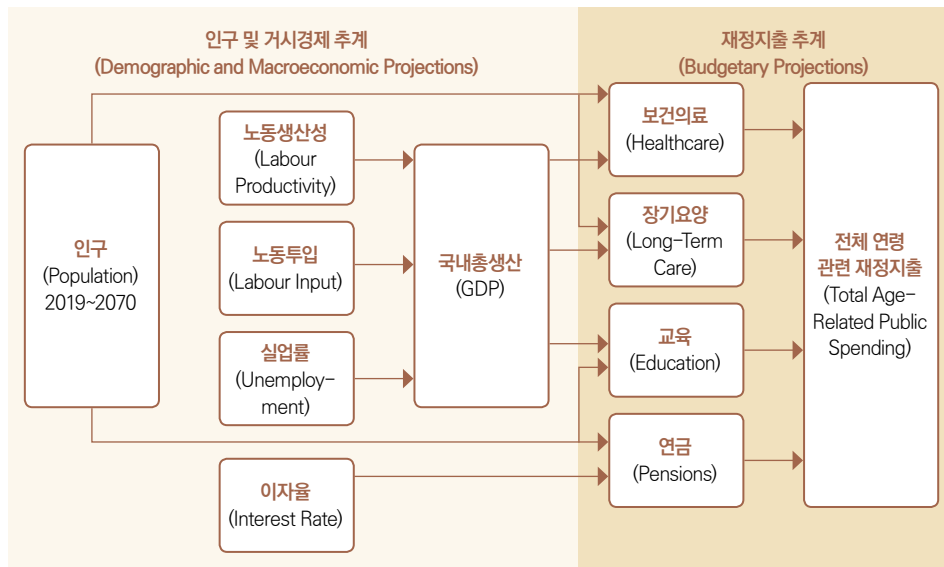
「Ageing Report」의 발단은 2001년 유럽의회이며, 균형재정 달성을 목표로 하여 인구구조 변화로 예상되는 어려움을 포함한 공공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정기적인 검토를 권고한데서 시작했다(EC, 2001). 이에 EC 산하 경제 및 재정위원회(Economic and Financial Affairs Council, ECFIN)는 꾸준히 재정지출 추계를 실시해 왔다. 이 노력의 연장선에서 2009년부터는 연령 관련 재정지출(Age-Related Public Spending) 전망을 핵심으로 하는 고령화 보고서가 발간됐고, 이후 새로이 공표되는 인구 전망 결과를 활용해 3년 주기로 보고서가 발표되고 있다. 최근 발표된 「The 2021 Ageing Report」는 유럽연합 27개 회원국과

노르웨이를 대상으로 4대(보건의료, 장기요양, 교육, 연금) 영역에 대한 2070년까지의 장기 재정전망이다. 고령화 보고서는 연령 관련 지출을 토대로 각국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거시적으로 고령화와 관련된 재정지출은 재정 적자, 부채 수준과 함께 중기 재정 목표치 산식에 반영되는 항목으로 총량 수준에서 유럽연합 재정 관리의 핵심요소가 된다. 또한 세부 지출 영역에서의 대응 방안 모색에도 적극적으로 활용된다(고혜진, 2019).



고령화 보고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인구 및 거시경제 추계와 재정 지출 추계의 두 단계로 구성된다(〈그림 3〉 참조). 유럽통계청(Eurostat)의 2019~2070년 인구 전망에 기초하여, 각 국가에 공통으로 적용할 노동력(참여율, 고용률, 실업률), 노동생산성 및 이자율을 구하기 위한 주요 가정과 전망 방법을 확정한다. 이를 통해 각 국가의 거시경제 전망치를 도출한 이후 2070년까지 모든 회원국의 국내총생산(GDP), 그리고 연금, 보건의료, 장기요양, 교육의 네 가지⁵ 정부지출 항목 각각의 장기 재정부담을 전망하고 이를 합해 고령화와 관련된 재정부담을 도출한다. 각 부문별로 장기 재정전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각 국가에서 장기적으로 부담이 가중되는 영역이 어디인지도 알 수 있다.

〈그림 3〉 2021년 연령 관련 지출 전망 개요



자료: European Commission(2020)

5. 2018년 「Ageing Report」에는 5대 영역(실업급여, 연금, 보건의료지출, 장기요양지출, 교육)이었으나, 실업급여가 고령화와 직접 관련 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2021년 보고서에서는 실업급여가 빠진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장기 재정지출전망(Projection)은 예측(Forecast)이 아니라는 점이다. 향후 반세기 동안 경제 발전을 전망하는 것은 상당히 불확실성을 전제한 작업이다. 전망은 ‘정책 변경 없음’이라는 가정하에 이루어지며, 미래를 예측(Predict)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 현재 정책이 변하지 않는다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고령화 재정전망은 기준선 전망(Baseline Projection) 이외에 다양한 시나리오를 고려한다. 2021년 보고서는 8개의 시나리오를 고려하는데, 그 이유는 국가 간 비교를 위해 적용한 단순한 가정만으로는 인구구조 변화가 재정에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표 1〉 2021년 고령화 보고서의 민감도 분석과 시나리오

인구 (Population)			노동력 (Labour Force)	생산성 (Productivity)	정책 위험 시나리오 (Policy Risk Scenarios)		
기대수명 증가	낮은/높은 순인구이동	저출산율	고령자의 높은 고용률	높은 총요소 생산성 및 위험 시나리오	은퇴 연령 연동	은퇴 연령 고정	연금급여 감소에 따른 대체 (Offset)
기준선 대비 2070년 까지 출생 시점의 기대수명 2년 증가 ¹⁾	기준선 대비 전체 추계기간 중 순인구 이동이 33% 높거나 낮음	기준선 대비 전체 추계기간 중 출산율이 20% 낮음	기준선 대비 고령 근로자 (55~74세)의 고용률이 10%p 높음	총요소 생산성이 0.8% 혹은 1.2%에 수렴 (기준선 1%), 수렴 속도는 기준 시나리오와 동일한 원칙과 시점을 따름	은퇴 연령은 기대수명 변화의 3/4에 따라 매년 조정	조기 및 법정 퇴직 연령과 경력에 기준 연도 상황에서 고정	기준 연도 대비 공적 연금 급여율이 10% 하락하면, 급여율 안정화 조치
			2021~2033년까지 고용률이 10%p 선형으로 증가 후 유지	표적(Target) 총요소 생산성은 추계 기준 연도에 발생해 2045년에 수렴			
			고령층의 높은 고용률은 비경제활동인구의 감소로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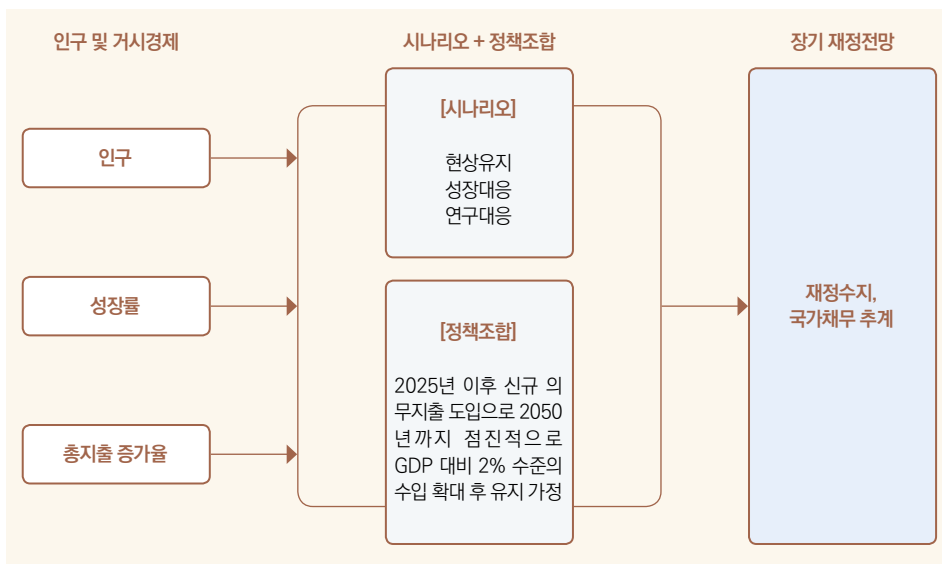
자료: European Commission(2020)



3. 우리나라의 장기 재정전망

급속한 초고령사회의 진입을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는 2015년에 정부가 처음으로 장기 재정전망을 발표한 데 이어 약 5년 만인 2020년 9월에 두 번째 장기 재정전망을 작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2020~2060년 장기 재정전망」에는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2019년 3월) 및 KDI 거시전망지표(2020년 4월)를 공통지표로 활용하고 8개 전문기관(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의 분야별 전망을 종합하는 등 그간 달라진 상황을 반영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향후 40년에 걸친 초·장기 재정전망인 만큼 기본전제인 인구 및 성장률 전망을 현실성 있게 예측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주요 지표들에 대한 시나리오별 전망치를 복수로 활용했다. 시나리오는 정부의 정책대응 없이 인구 감소 및 성장률 둔화 추세가 유지되는 경우(현상유지), 성장률 둔화가 개선된 경우(성장대응), 인구감소세가 둔화된 경우(인구대응) 등 3가지로 구성된다.

〈그림 4〉 정부의 2020년 장기 재정전망 개요



자료: 기획재정부(2020)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전망을 위한 기본전제는 크게 인구·거시지표와 총지출 증가율로 구분된다. 인구와 성장률 지표는 전문기관(통계청, KDI)의 추정치를 활용, 총지출 증가율은 총지출 추이 및 선진국 사례 등을 감안해 중장기적으로 경상성장률 수준이 증가한다고 가정한다. 전망 방식은 정부의 출산율 및 성장률 제고 노력 등을 감안, 시나리오별 인구·거시 변수를 가정해 국가채무비율을 전망했다.

EC의 고령화 보고서와 우리나라의 장기 재정전망을 인구 및 거시경제 추계, 재정지출 추계, 시나리오로 구분해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표 2〉 참조).

〈표 2〉 「Ageing Report」와 우리나라 장기 재정전망 비교

구분	EC의 「Ageing Report」	우리나라 장기 재정전망
인구 및 거시경제 추계	인구 전망을 출발점으로 하여, 노동생산성, 노동투입, 실업률, 이자율을 통한 국내총생산(GDP) 산출	인구, 성장률, 총지출 증가율 * 총지출에 사회연금보험, 기타복지지출 등 의무지출 포함
재정지출 추계	정부지출 항목 각각의 장기 재정부담 전망: 공적연금, 보건의료지출, 장기요양지출, 교육	4대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추계
시나리오	8가지 시나리오 제시 ① 인구 관련: 기준선 대비 2070년까지 출생 시점의 기대수명 2년 증가 ② 인구 관련: 전체 전망 기간 중 기준선 대비 순인구이동이 33% 높거나 적음 ③ 인구 관련: 전체 전망 기간 중 기준선 대비 출산율이 20% 더 낮음 ④ 노동력: 고령 근로자의 높은 고용률 ⑤ 생산성: 높은 총요소생산성과 시나리오 ⑥ 정책시나리오 관련: 퇴직 연령은 현재 퇴직 연령의 기대수명 변화의 3/4에 따라 매년 조정 ⑦ 정책시나리오 관련: 조기 및 법정 퇴직 연령과 경력 요건은 기준 연도의 상황에서 동결 ⑧ 정책시나리오 관련: 소득 관련 공적 연금 급여율 이 기준 연도 대비 10% 하락하면, 급여율 안정화 조치를 취함	3가지 시나리오에 정책조합 가정 ① 현상유지(정책 무대응): 인구감소세 유지, 실질 성장률 크게 둔화 ② 성장대응: 인구 감소(현상유지와 동일), (경제체질 개선으로)실질성장률 하락폭 둔화 ③ 인구대응: (출산율 제고 등에 따라) 인구 감소폭 둔화, 실질성장률은 크게 둔화(현상유지와 유사) + (시나리오별 + 정책조합) 정책조합: 2025년 이후 신규 의무지출 도입으로 2050년까지 점진적으로 GDP 대비 2%p 수준의 수입 확대 후 유지 가정

자료: European Commission(2020); 기획재정부(2020)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4. 나가며

지금까지 EC의 고령화 보고서와 우리나라의 장기 재정전망을 함께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의 장기 재정전망은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및 성장률 하락 등의 구조적 위험요인에 따른 재정의 지속가능성 점검이 목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변화에 관심이 높다. 한편, 고령화 보고서는 고령화로 인한 공적연금, 보건의료, 장기요양, 교육 등의 지출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장기 재정지출 추계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장기 재정전망을 EC의 고령화를 타겟으로 한 재정지출 추계인 고령화 보고서와 단순 비교할 수는 없다. 다만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EC의 고령화 보고서는 초고령사회를 준비해야 하는 우리나라에 주는 의미가 적지 않다.

EC의 고령화 보고서에 기초해 추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EC의

고령화보고서에서는 공적연금을 포함해 보건의료, 장기요양, 교육 등을 재정지출로 추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공적연금 이외의 재정지출 항목에 대해 고려해볼 수 있겠다. 왜냐하면 고령화가 진전됨에 따라 공공의료와 장기요양 지출은 중·장기 재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이기 때문이다. 둘째, EC는 총 8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는데 인구 관련 시나리오로 △기대수명 2년 증가(고령화 대비) △순인구이동 △출산율로 구분, 노동력과 생산성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 정책 시나리오에는 △퇴직 연령과 경력요건 △공적연금 급여율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한편 우리나라는 현상유지, 성장대응, 인구대응 3가지 시나리오에 정책조합을 추가해서 제시하고 있다. EC가 다양한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도 장기재정추계의 불확실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시나리오의 다양화를 고려해 볼 수 있겠다.

참고 문헌

- 기획재정부(2020), 재정혁신과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통해 '60년 국가채무비율 60%대 수준으로 관리
- 고혜진(2019), 유럽연합 고령화 보고서의 지출추계 방법과 교훈, 국제사회보장리뷰, Vol.10, 71~82
- 한국재정정보원(2020), "2020~2060년 장기 재정전망". 월간 나라재정 9월호
-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15), "2016~2060 장기 재정전망". 조세재정 BRIEF 12월호
- 통계청(2019), 2019년 장래인구특별추계를 반영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
- 통계청(2020), 2020 고령자 통계
-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2020),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 European Commission(2017), 「The 2018 Ageing Report」
- European Commission(2020), 「The 2021 Ageing Report」
- European Council(2001), 「Conclusions of the Presidency. Bulletin」
- UN(2019),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19(<https://population.un.org/>)



애자일(Agile)하게 혁신하기

허은녕 서울대학교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heoe@snu.ac.kr)



‘애자일(Agile)’은 2020년 초반에 전 세계 경영혁신의 최대 키워드로 등장했다. 그리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경제사회 전반에 위기의식이 팽배해지면서 올해 더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변화의 적응에 유리한 시스템으로의 혁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날렵한’, ‘민첩한’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애자일은 조직 구성과 운영 방식의 혁신 방향을 이야기하고 있다. 군대나 정부 부처와 같이 쉽게 바꿀 수 없는 경직된(Rigid) 조직은 물론, 상대적으로 유연한 기업의 조직조차도 유연한 방향으로 혁신이 필요하게 됐기 때문이다. 부서 간 칸막이를 줄이고 몸집을 가볍게 하며 구성원 개개인의 의사결정 권한을 확대하여 상황변화에 기민하고 민첩한 대응이 가능한 조직을 만들자는 것이 바로 애자일 혁신의 개념이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등은 물론 국내외 우수 기업들은 이미 애자일해지기 위한 세미나와 연구를 진행하고, 또 이를 적용하여 성과를 내고 있다. 신속히 이루어진 미국 제약회사의 코로나19 백신 개발의 성공 스토리에도 애자일이 자리 잡고 있다. 기존의 부서보다 더욱 작은 규모의 팀을 만들거나 월 단위의 단기 계획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업무를 수행하는 등 외부에서 오는 변화와 충격의 피드백이 신속히 반영 가능한 방향으로의 조직 개편을 진행했기 때문이다.

정부의 재정과 예산회계 분야도 예외가 아니다. 재정 관련 정보의 적용과 사용에는 정부조직의 구조적인 문제와 더불어 규제와 규정이 서로 열키설키 얽혀 있어 유연성을 확보하기가 매우 어렵다. 특히 예산회계의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 못지않게 재정과 관련된 수많은 빅데이터를 효과성 있게 활용하고 적용할 수 있는 유연한 운영시스템을 확보하고 아울러 이를 실제로 유연하게 운영·관리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지금은 그림이 떡이다.

사실 정부 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를 민간기업 수준으로 유연성을 가지고 활용하는 사례는 아마 세계 어디에서도 찾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애자일하고 유연한 정부기구를 만들려는 시도는 많이 있었으며 성공사례도 상당하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딜리버리 랩(Delivery Lab)이다.

딜리버리 랩(Delivery Lab)이란 정부의 여러 부처 및 민간전문가가 협업하여 공공부문 정책과제의 성과를 조기에 제고할 목적으로 구성되는 프로젝트 조직을 말한다. 상시조직이 아니고 단기간 동안 존재하는 한시적 조직으로, 일반적인 정부나 기업의 조직에 비해 상당히 애자일한 특성을 가진다. 정부조직에 이러한 형태를 적용한 사례는 많지 않지만 영국, 프랑스, 미국, 말레이시아 등에서 이러한 애자일한 조직을 통하여 협업에 성공하고 정책성과를 혁신적으로 제고한 사례가 있다.

영국은 토니블레이 총리가 집권 2기에 적용한 PMDU(Prime Minister Delivery Unit)를 들 수 있다. 범죄, 교통, 교육, 보건 등 주요 4대 정책목표의 성과를 단기간 내에 제고하려는 목적에서 총리 직속으로 2001년에 설치했다. 설치 2주 만에 성과를 내기 시작했는데 범죄율의 경우, 6개월 내에 10% 이상 감소했다. 말레이시아는 2009년 나지브 수상이 취임한 후 수상실 직속으로 설립한 PEMANDU(Performance Management Delivery Unit)가 성공사례이다. 주요 개혁정책에서 모두 단기간에 높은 성과를 실현했다.

그 성공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먼저, 리더가 딜리버리 랩의 설립을 주도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위에 언급한 영국 및 말레이시아의 경우 총리나 수상이 직접 시행을 명했다. 또한 총리실이나 수상 직속으로 기구를 두고 자주 보고를 듣고 의견을 개진하는 등 기구에 힘을 실어줬다는 공통점이 있다.

두 번째는 구성이다. 관계부처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는 것은 여느 정부위원회와 비슷하나 민간전문가가 다수를 차지하며 모두 전일제로 근무하는 집중적이고 고강도로 업

무를 수행하는 형태임은 크게 다르다. 말레이시아 PEMANDU의 경우는 3년 계약으로 40여 명의 소규모 인원으로 구성하여 유연성을 확보했다. 또한 이 중 60%는 3년 계약으로 민간전문가를 고용하여 기구 안에 애자일한 특성을 끌어들이었다. 나머지 40%를 차지하는 정부부처 공무원의 경우에도 당해 부서의 최고 엘리트들을 3년간 파견받아 중간에 교체가 없도록 했다. 또한 이들이 다시 부처로 돌아갈 때 불이익이 아니라 승진할 수 있도록 혜택을 주어 혁신성도 높이고 파견 공무원들이 해당 업무에 전념하도록 유도했다는 특징이 있다.

세 번째는 의사결정 방식이다. 딜리버리 랩의 수장은 대부분 민간전문가로서, 총리나 수장과 자주 만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임명하여 힘을 실어주었다. 영국의 경우 딜리버리 랩의 수장으로 저명한 교육전문가인 마이클 바버를, 말레이시아의 경우는 국민 신망이 높았던 말레이시아항공 CEO 출신 이드리스 잘라를 임명하여 기관의 권위를 높였다. 함께 결정권자의 수시 면담과 이를 통한 신속한 승인 등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확보, 역시 애자일한 특성을 확대했다. 그 덕분에 즉시 실행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구체적인 목표와 세부적 집행계획과 함께 단시간에 시행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통계에 기반한 성과관리를 했다는 것이다. 정책의 목표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면 나올 수밖에 없는 단순한 산출물이 아니고 정책수요자 입장에서 구체적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데이터·사실(Fact)에 기반하여 평가토록 하여, 개인이나 집단의 견해 차이로 인한 다툼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했다. 이로 인하여 한시적이고 유연한 조직이 가질 수 있는 단점을 막고 합리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리고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하면 기구를 해산하고 기존의 부처로 업무를 이관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음으로써 애자일한 특성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다는 점도 추가하고자 한다.

정부의 조직이나 의사결정 방식의 애자일한 혁신은 기존의 중앙집중형의 의사결정 및 정책결정 방식에 새로운 변화가 모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정부의 정책수립에서의 부처간 협업은 대부분 총리실이나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관련 부처의 대책을 망라한 종합대책 형태로 발표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시스템이 가지는 필연적인 특성일 것이다. 융합은 커녕 협업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우며 자료는 공유되지 않고 분석은 단편적인 수준에 그치고 만다. 중앙에 집중된 시스템 덕분에 자료를 모으는 것은 빠르지만 협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책임분산 및 이를 위한 조직의 유연성이 뒷받침되어있지 않기 때문이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익숙해지면서 자료를 디지털화하고 데이터베이스로 만드는 작업은 이제 대부분의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도 예외가 아니라서, 전자문서화 등은 이미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다. 재정 분야도 ‘디브레인(dBrain)’이나 ‘e나라도움’ 등의 재정정보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데, 하루에만 60만 건 이상의 재정업무가 이루어지고 있어 실로 엄청난 빅데이터가 이들 플랫폼에 쌓이고 있다. 한국재정정보원은 이들 시스템을 운영, 관리하고 시스템 내에 축적된 데이터를 분석·가공해 고품질 재정통계를 생산함과 동



시에 이를 활용하여 재정당국의 정책수립과 운용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 중에는 빅데이터 말고도 클라우드나 블록체인, 그리고 AI 등도 있다. 클라우드나 블록체인의 분산형 특성은 애자일의 특성과 닮아 있다. 또한 AI의 신속하고 유연한 의사결정 역시 애자일의 특성과 닮아있다. 재정정보 부문에 애자일 혁신이 필요하다면, 그 방향에 이러한 개념을 활용하는 것은 어떨까? 정부 재정업무의 자료화에 더하여 국가 재정업무 효율화와 재정생산성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분석이 재정 관련 국책연구기관은 물론 다양한 기관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려하는 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이를 학계나 민간에까지 확대한다면 한국재정정보원 원장 직속으로 민간전문가가 함께하는 애자일한 딜리버리 랩 조직을 만들어 분석결과들을 모니터링하면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의 정책을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마이크로소프트의 CEO인 사티아 나델라(Satya N. Nadella)는 애자일 혁신의 핵심은 바로 구성원이 모두 '성장 마인드셋(Growth Mind-Set)'을 가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구성원 모두가 개인성과나 이익을 쫓는 게 아니라 조직의 미래와 발전을 이루고자 할 때 혁신이 이루어진다는 의미이겠다. 더 밝은 미래를 위한 애자일한 혁신을 신나게 수행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



데이터 정책의 새로운 접근방식: 애자일

김인숙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초빙연구위원(isk7966@g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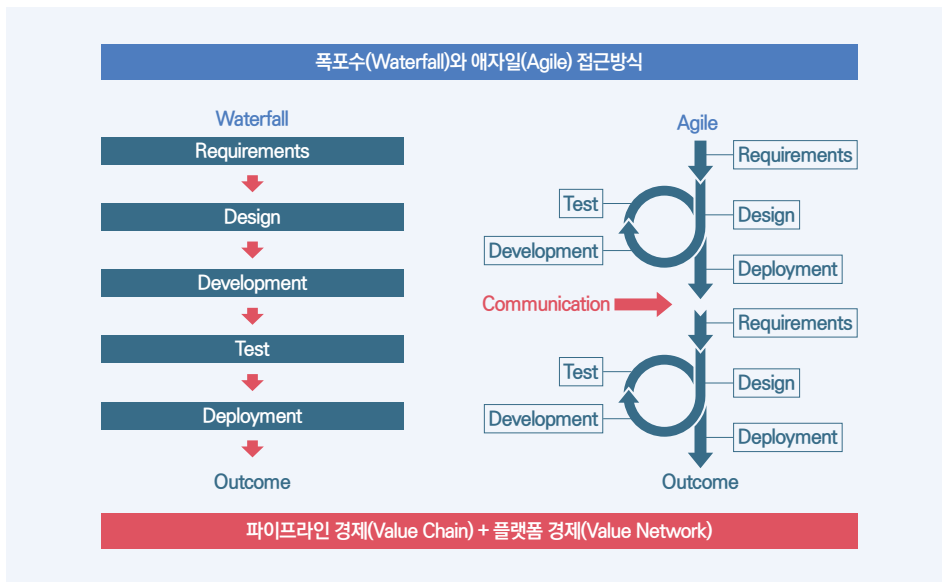
— ① —

선도적인 정책 설계의 필요성: 새로운 접근방식

2020년 한국은 코로나19 위기에서 국제적으로 'K-방역'이라는 성과를 알리게 되었다. 2021년 무디스는 ESG(Environment, Society, Governance) 지표에서 대한민국을 1등급으로 평가했다. 한국은 독일과 함께 나란히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 특히 거버넌스(Governance) 부분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고, 이는 K-방역에서 보여준 정부 정책의 투명성에 기인한다. 자동차 안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드라이브스루(Drive Through)'와 같은 아이디어를 실시간으로 실현했다. 상황변화에 기민하게 적응하는 애자일(Agile) 정책을 구현한 것이다.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협력개발기구)와 WEF(World Economic Forum, 세계 경제 포럼)의 ‘애자일 국가헌장(Agile Nations Charter)’에는 캐나다, 덴마크, 이탈리아, 일본, 싱가포르, 영국이 참여했다. 애자일은 “혁신의 잠재력을 발휘하며, 시민을 보호하고, 시민의 가치를 반영하기 위해 규칙 제정(Rule-Making)에서 더욱 애자일한 접근방식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애자일은 실시간으로 사용자와 소통하면서 시장 및 상황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것이다. 애자일은 시민과 기업이 원하는 바를 정책의 중심으로 두고, 직접 결정할 수 있게 한다.

〈그림 1〉 폭포수와 애자일 추진방식의 차이점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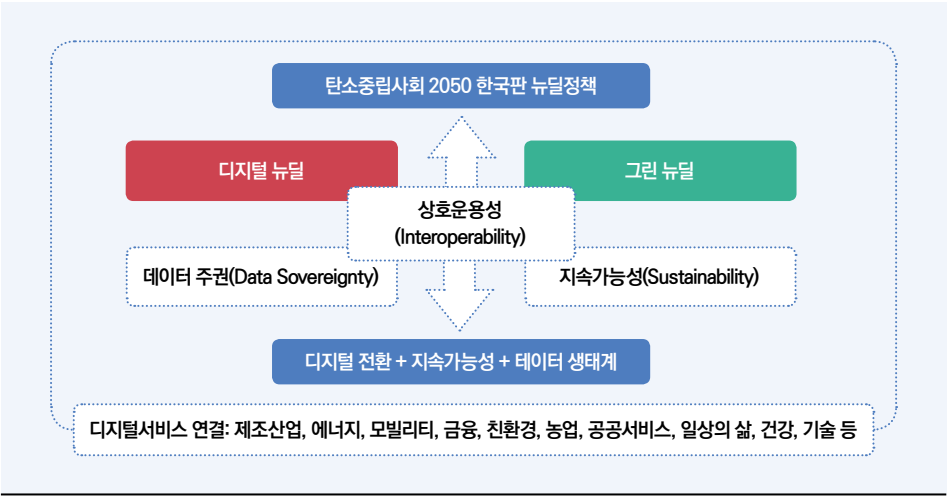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은 2001년 애자일 선언을 했는데, 고객과 대화하면서 제품을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소프트웨어 개발은 고객의 요구사항, 디자인, 제품 개발, 테스트, 출시, 결과물 순서로 이뤄진 5단계를 기본으로 한다. 기존의 폭포수 방식은 초기 설정한 요구사항 그대로 끝까지 진행하게 된다. 이에 비해 애자일 방식은 위 5단계를 빠르게 진행한 후, 고객과 소통하며 새로운 다섯 단계를 시작한다. 회차를 거듭하며 계속 반복된다. 폭포수 방식이 수직적인 가치사슬 중심의 파이프라인 경제라면, 애자일 방식은 네트워크 가치 창출 중심의 플랫폼 경제라 할 수 있다. 코로나19를 기점으로 정책수행에서 애자일 방식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 정부 주도로 미래를 예측하여 사전에 정책수단을 확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방역정책 그 자체에서 정부는 유연하게 그리고 애자일하게 정책을 수행해야 했다.

데이터 정책의 새로운 접근방식: 애자일 정책

2020년 정부는 ‘한국판 뉴딜정책’과 ‘탄소중립 2050’ 정책목표를 공표했다. 한국판 뉴딜정책은 크게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로 나뉜다. 탄소중립사회는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 순 배출 제로(Net Zero)를 지향한다. 이 두 정책은 데이터로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다. 제품과 서비스 단위의 자원과 에너지 사용량을 데이터로 표시하고, 이를 근거로 거래한다. 데이터의 표준을 통한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은 디지털 전환과 그린 뉴딜을 동시에 충족시키게 된다. 따라서 디지털 전환과 그린 뉴딜 그리고 탄소중립 2050은 네트워크 연결을 전제로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

〈그림 2〉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디지털 전환과 연결성



우리 일상생활은 이동, 건강, 교육, 금융, 공공데이터가 연결되면서 더욱 편리해질 것이다. 제조, 유통, 건강, 에너지, 농업, 기술 등의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새로운 사업모델이 창출되기 때문이다. 결국 데이터 생태계는 국가와 산업의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작동할 것이다. 이제 사용자 스스로 생태계의 규정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즉 데이터 주권을 기본으로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며, 이에 필요한 상호운용성이 작동하는 데이터 생태계를 설계하는 일이다. 생태계는 그 구성원들에게 순편익을 제공할 때 유지된다. 생태계의 확대 발전은 구성원들이 스스로 결정하는 자기결정권, 즉 데이터 주권이 보장될 때이다. 여기서 데이터 주권은 데이터를 수집, 교환, 분석, 저장하는 각 단계에서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따라서 한국판 뉴딜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주권을 보장하는 디지털 뉴딜과 이를 통해서 구축되



는 건강한 데이터 생태계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그런 뉴딜이 긴밀하게 연결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지속가능성 요소로 ‘더 좋은 일자리(Decent Work)’를 포함시킨 점을 주목해야 한다. 좋은 일자리 창출과 탄소중립 2050 그리고 디지털 전환을 동시에 추구하는 한국판 뉴딜정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선도국가로서 우리는 이제 기술혁명을 넘어서서 이제는 조직혁명을 설계해야 할 시점이다. 누가 그리고 어떻게 애자일 정책을 추진할 것인가이다.

〈그림 3〉 독일 디지털정상회의의 의제별 플랫폼



독일 디지털정상회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분야를 모두 포함하는 토론의 장(場)이다. 의제별로 대표자들이 모여서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합의한 내용을 정책의제로 도출한다. ‘4차 산업혁명 플랫폼’을 포함하여 10개 플랫폼으로 구성되며, 모빌리티, 디지털 혁신, 교육, 일자리, 인공지능, 디지털 정부, 보안, 소비자 정책으로 구분된다. 이 모든 주제를 논의하는 플랫폼 참가자들이 매년 ‘디지털정상회의’라는 행사에 참석한다. 집단지성의 지식을 공유하고, 그 내용을 축적하면서 애자일 정책을 작동시킨다. 미래를 이용자가 설계하고 이 내용을 정부 정책에 실시간으로 반영할 수 있는 조직혁신 사례이다.

— 3 —

국내 데이터 정책의 방향과 원칙: 애자일 정책 실험

애자일 정책을 실험하기 위해서는 산업계와 정부는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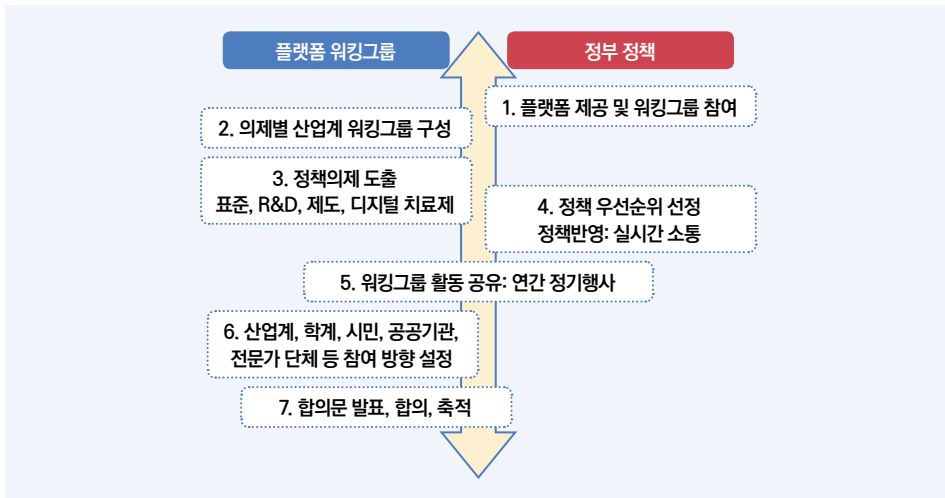
첫째, 정부의 인식 변화이다. 정부는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시장에서 산업정책을 혼자서 세울 수 없음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정책의 이용자가 원하는 바(Needs)를 파악해서 정책을 공급(Wants)해야 한다. 정책의 공급과 수요가 일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책의 현장성을 올리는 가장 빠른 방법은 정책수요자의 요구사항들을 실시간 반영하는 것이다. 정부는 산업계 워킹그룹이 제안한 정책의제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야 한다. 시민이 직접 정책설계에 참여하는 방식이 사회적인 수용성을 높이는 가장 빠른 길이다. 정책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결정권을 행사하고, 반복적으로 논의하면서 합의했기에 그 누구보다 정책을 잘 이해할 것이다. 본인 자신이 결정한 정책이기에 애정을 가지며, 더욱 잘 지킬



것이다.

둘째, 정부는 데이터 정책을 의제로 산업계 플랫폼 워킹그룹 구성을 지원한다. 초기에는 플랫폼 사무국 구성 및 시설 임대 등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한다. 정부와 공공기관 역시 의제별 워킹그룹에 참여한다(〈그림 4〉의 1번). 산업계는 의제별로 20인 내외의 워킹그룹을 구성한다(2번). 구성원은 직업과 전공 및 업종이 모두 달라야 한다. 워킹그룹은 정책의제 초안을 도출한다(3번). 제안된 정책의제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정책에 반영한다(4번). 6개월 혹은 1년을 주기로 워킹그룹은 활동 결과를 공유한다(5번). 산업계, 학계, 시민, 공공기관, 전문가 단체 등이 모두 모여서 방향을 설정한다(6번).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고 축적되면서 가치를 창출하는 네트워크가 형성된다. 합의문과 사실상 표준 및 정책 시나리오가 도출된다(7번).

〈그림 4〉 산업계 워킹그룹과의 협업방식



셋째, 탄소중립 2050 실현은 엄청난 사회변화를 요구한다. 일자리 변화, 지역경제의 변화, 산업구조와 에너지 시스템의 변화가 따른다. 이를 시민이 수용하지 않으면 정부 정책은 실현될 수 없다. 이러한 전환이 과연 정의로운가를 묻는 ‘정의로운 전환’이 화두이다.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수정해가는 방식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지름길이다.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에서 산업계와 애자일 정책을 실험해보길 제안한다. 이용자들이 데이터 생태계의 규칙을 합의하는 것을 시작으로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데이터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날이 오길 기대한다.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 '4차 피해지원대책' 3가지 원칙

1



피해가 집중된
계층에 집중 지원

2



보다 두텁게 지원하고
최대한 사각지대를 보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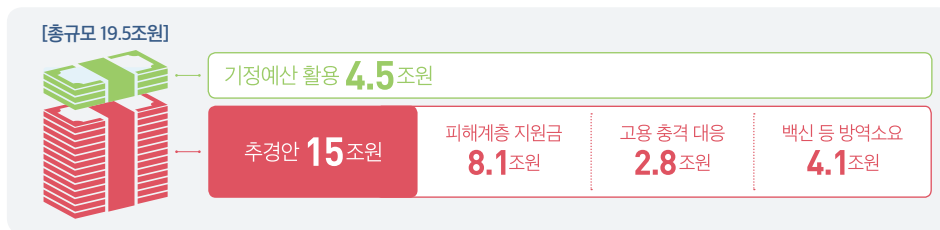
3



재정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최대한 적재적소 지원

□ 피해 지원을 위한 재정 수단

- ①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 ② 기정예산(558조원) 연계 활용이라는 투트랙(Two-Track) 패키지로 설정
즉, 총규모 19.5조원은 추경안 15조원과 기정예산 활용 4.5조원으로 구성



□ 추경안 15조원의 재원은 1차적으로 기존 가용재원을 최대한 발굴, 충당하고 부족분은 적자국채로 하되 그 발행은 최소화

$$\left[\begin{array}{c} \text{특별회계 세계잉여금} \\ 2.6 \text{조원} \end{array} + \begin{array}{c} \text{한국은행 결산잉여금} \\ 0.8 \text{조원} \end{array} + \begin{array}{c} \text{기금 여유 자원} \\ 1.7 \text{조원} \end{array} + \dots \right] = \text{총 } 5 \text{조 } 1 \text{천억원}$$

- 현시점에서 활용 가능한 총 5조 1천억원을 발굴 활용하고, 나머지 부족분 9.9조원은 불가피하게 국채발행을 통해 조달
- 수혜대상은 3차 피해지원대책보다 약 200만 명 이상 늘어난 총 690만 명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규모 총 19.5조원 (690만명)

추가경정예산안 15.0조원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긴급 피해지원금  **8.1조원**
(564만명)

①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6.7조원**
(385만명)
*5개유형 : ①집합금지(연장), ②(완화),
③집합제한, ④일반(경영위기), ⑤(매출감소)
지원단가: ①500/②400/③300/④200/⑤100만원

②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0.2조원**
(115만명)
집합금지(50%)·집합제한(30%)
3개월간 감면
*①과 중복

③ **근로취약계층 고용안정지원금** **0.6조원**
(94만명)
특고·프리랜서, 법인택시기사,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④ **취약계층 생계지원금 등** **0.6조원**
(85만명)
등록노점상, 한계근로빈곤층,
생계위기가구 대학생

긴급 고용대책  **2.8조원**
(81만명)

① **고용유지 지원** **0.3조원** (25만명)
② **청년·중장년·여성 맞춤형 일자리 창출** **2.1조원** (27.5만명)
③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0.2조원** (11만명)
④ **근로가구 돌봄 및 생활안정 지원** **0.2조원**
(17만명)

방역 대책  **4.1조원**

① **코로나 백신 구매·접종** (7,900만명분) **2.7조원**
② **진단·격리·치료 등 방역대응** **0.7조원**
③ **의료기관 손실보상** **0.7조원**

기정예산 활용 피해지원 4.5조원

① **소상공인·중소기업 피해지원** **2.5조원**
(22만명)
긴급 금융지원, 버팀목자금 추가지원, 경쟁력 회복
② **고용 지원** **1.8조원**
(14만명)
고용연계 정책금융, 경영애로업종 고용창출 지원
③ **저소득층·취약계층 등 지원** **0.2조원**
(10만명)
생계위기가구 긴급복지, 감염병 예방치료 인프라





2021 숫자로 보는 나라재정

지은초 재정정보분석본부 부연구위원(anncho@kpfis.or.kr)

2021년 1월 말 기준

총수입 **57.3조원**

2021년 예산
482.6조원

진도율
11.9%



총지출 **53.9조원**

2021년 예산
558.0조원

진도율
9.7%



통합재정수지

3.4조원 적자

(누적 기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제외한 수치

전월 대비

+3.1

조원

관리재정수지

1.8조원 적자

(누적 기준)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차감한 수치

전월 대비

-0.2

조원

국가채무

826.2조원

(2020년 11월 말 누적 기준)



중앙정부
채무 기준

전월 대비

+13.4

조원

주 1) 2020년 결산수치가 확정되지 않음에 따라 2021년 1월 기준 국가채무 통계는 산출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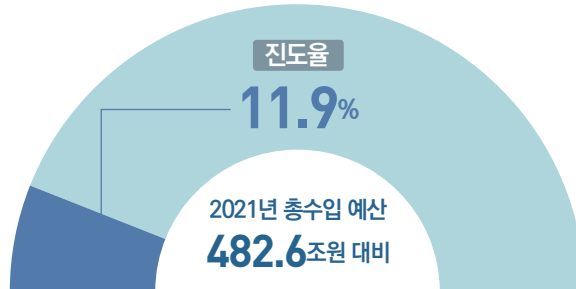
2) 구성항목별 합계는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자료: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2021.3.

총 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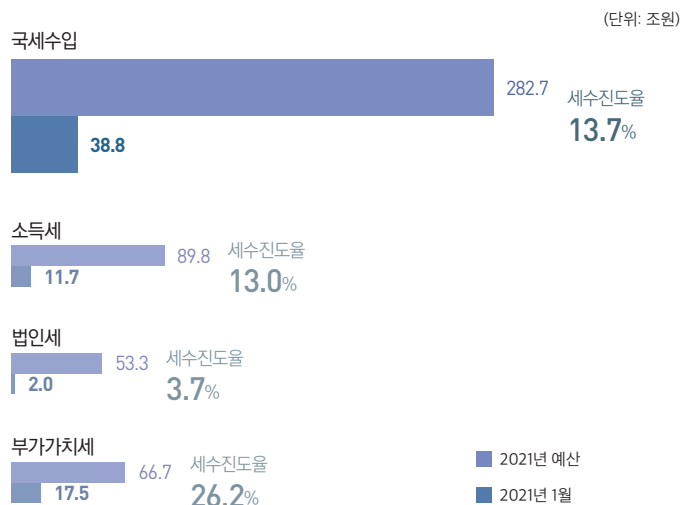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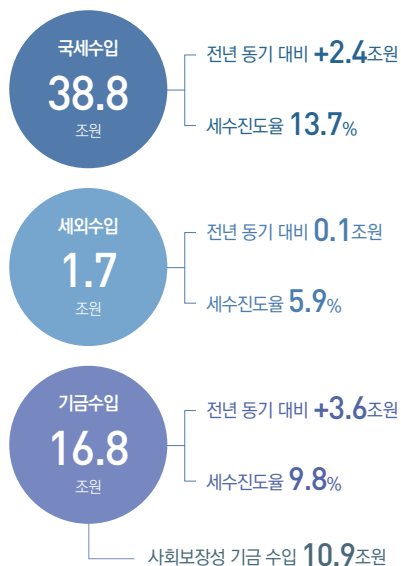
• 2021년 1월 말 기준

총수입
57.3
조원



전년 동기 대비
+6.1조원

주: 총수입 진도율은 해당 연도의 총수입 예산 대비 당월 누계 총수입 규모의 비율을 의미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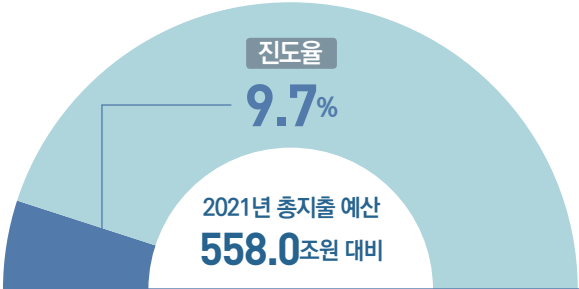


주: 세수 진도율은 해당 연도의 세입예산 대비 당월 누계 세입 규모의 비율을 의미

총 지출

• 2021년 1월 말 기준

총지출
53.9
조원



전년 동기 대비
+2.9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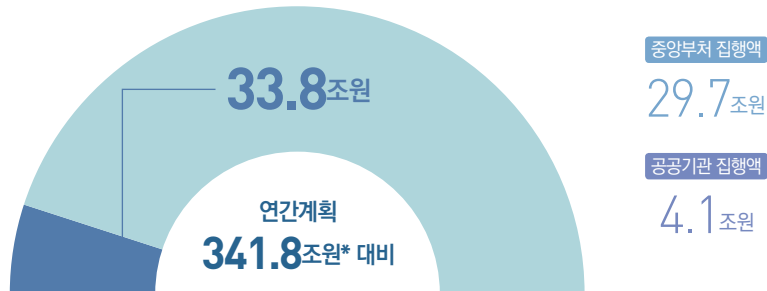
주: 총지출 진도율은 해당 연도의 총지출 예산 대비 당월 누계 총지출 규모의 비율을 의미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



주요 관리대상사업 집행실적

연간계획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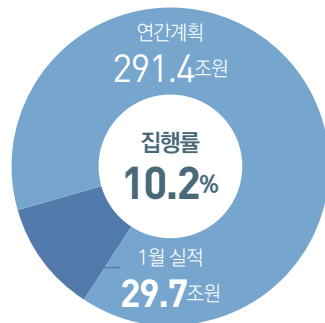
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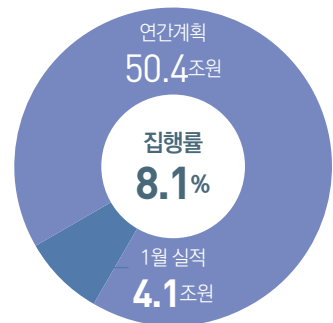
* 2020년 이월예산 미포함, 4월호에 이월예산을 포함하여 연간계획 수정 예정



중양부처



공공기관



(단위: 조원, %)

상위 5개 부처

(누적 기준)

	부처명	1월 실적	집행률
①	중소벤처기업부	4.3	29.8
②	고용노동부	1.4	20.9
③	보건복지부	5.9	19.8
④	해양수산부	0.9	17.2
⑤	산업통상자원부	1.3	12.9

주 1) 주요 관리대상사업은 47개 중앙행정기관과 39개 기금, 33개 공공기관의 인건비, 기본경비, 보전지출, 내부거래를 제외한 주요사업비에 해당
(「국가재정법」 제9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

2) 집행률은 해당 연도의 연간 계획 대비 당월 누계 실적 규모의 비율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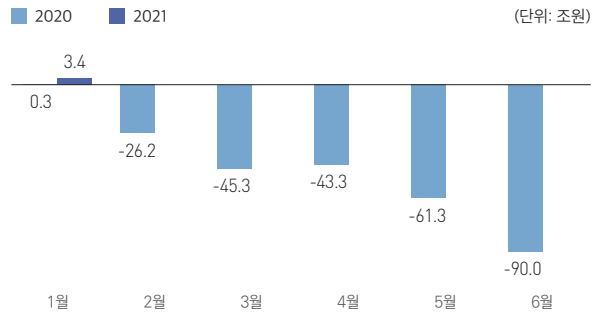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

재정수지

• 2021년 1월 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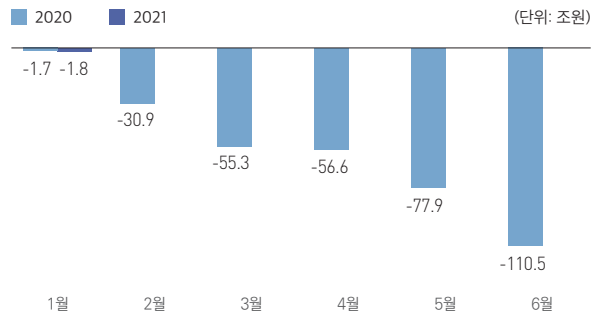
통합재정수지
3.4조원
흑자

전년 동기 대비
+3.1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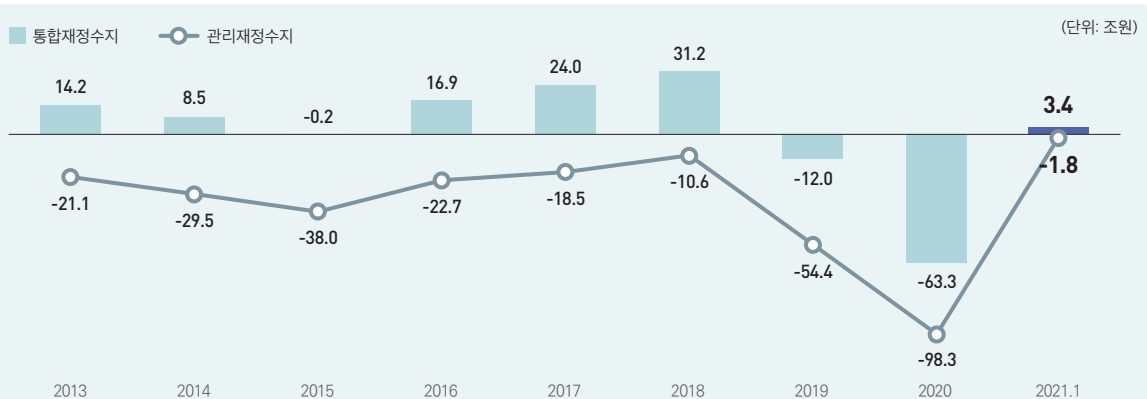
관리재정수지
1.8조원
적자

전년 동기 대비
-0.2조원



사회보장성기금수지
5.3조원
흑자

- 주 1) 통합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차감하여 산출
 2) 사회보장성기금수지는 4개 기금(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의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의미
 3)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차감하여 산출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



주 1) 2020년은 11월 말 기준

2) 2020년 12월 말 재정수지 실적치는 기금 결산 후 취합·분석을 거쳐 국가결산 발표 시(4월 초) 공개할 예정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

국가채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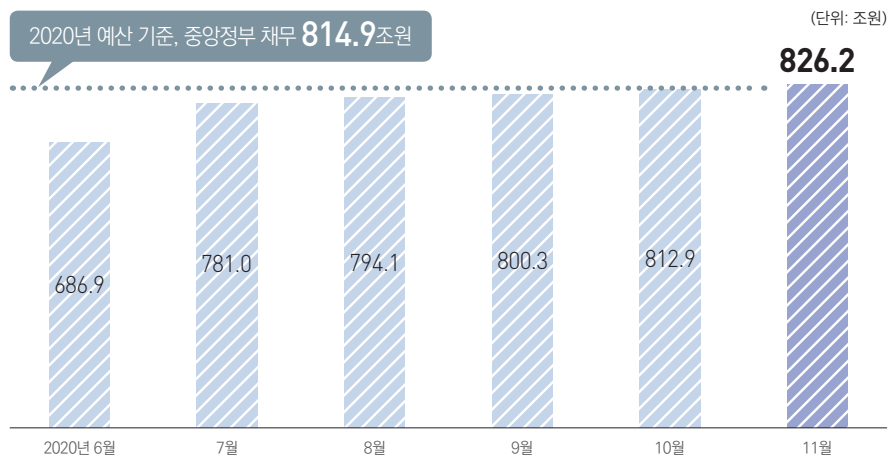
• 2020년 11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
826.2
조원

전월 대비
+13.4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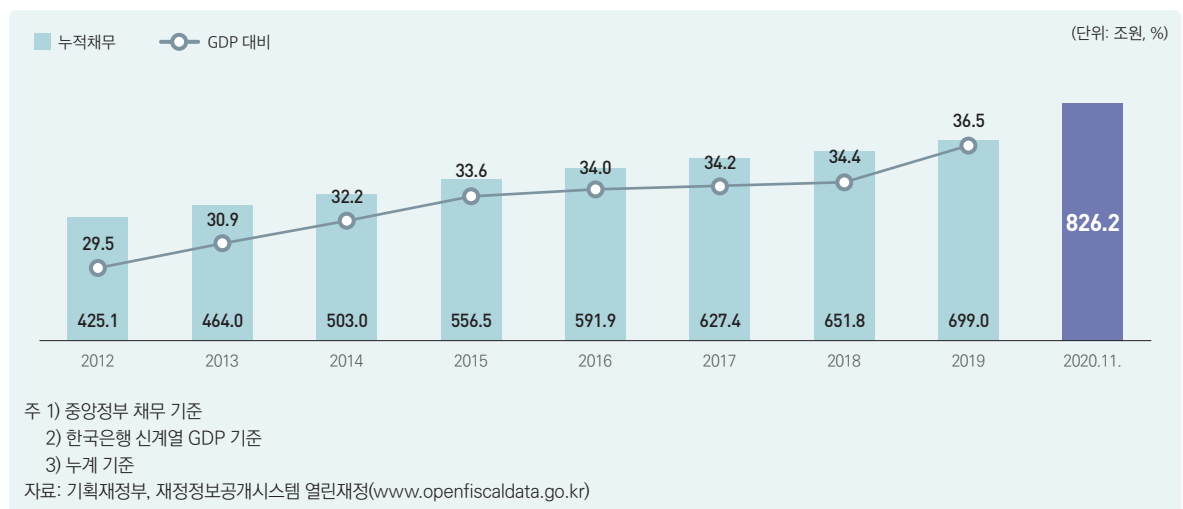
전년 대비
+127.3조원

* 2020년 결산수치가 확정되지 않음에 따라 2020년 11월 말 기준 국가채무 통계 수치 제공



주: 2020년 예산은 제4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은 정부의 예산, 집행, 결산에 대한 재정통계 및 시각화 자료와 재정 관련 보고서, 간행물 등 다양한 재정정보를 한 번에 찾아볼 수 있는 국가재정통계 공식 플랫폼입니다. 「열린재정」을 통해 본 나라살림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요 재정통계를 「열린재정」에서 어떻게 찾아볼 수 있는지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열린재정」을 통해 본 나라살림

조현희 재정정보분석본부 연구원(hyunheecho@kpfis.or.kr)

세계잉여금

지난 2월 2020회계연도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였습니다. 마감 결과, 확정된 총세입은 465.5조 원, 총세출은 453.8조원, 세계잉여금은 9.4조원 흑자를 기록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세계잉여금이란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차감한 결산상 잉여금 중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 중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국가재정법」 제90조에 따라 교부세 및 교부금 정산,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국가채무 상환에 순서대로 사용되며, 남은 금액은 추가경정예산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세계잉여금에 대한 정보를 「열린재정」에서 어떻게 찾아볼 수 있는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추이

알기 쉬운 재정 > 테마통계 > 세계잉여금 > 세계잉여금 추이

세계잉여금 추이는 '알기 쉬운 재정 > 테마통계 > 세계잉여금 > 세계잉여금 추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2001년부터 2019년까지의 △세계잉여금 규모와 함께, 이 중 「국가재정법」 제90조에 따라 사용된 △지방교부세 및 교부금 정산 △채무상환 △다음연도세입이입 규모를 그래프와 통계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열린재정」에서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테마통계

세계잉여금

Q 검색

세계잉여금 추이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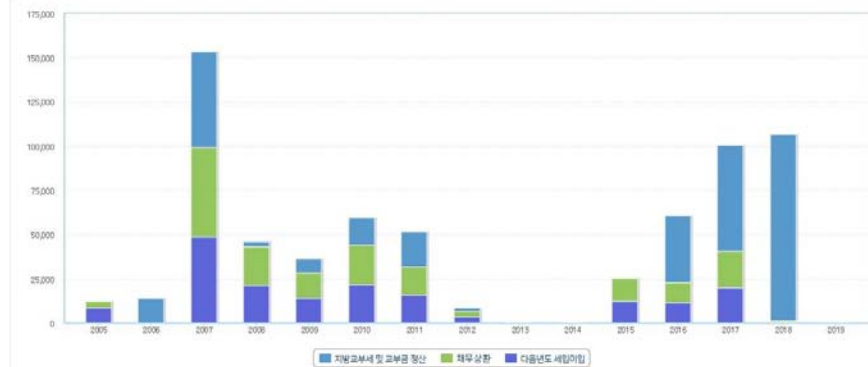
■ 그래프

2019

Q 조회

세계잉여금 추이

단위 : 억원



■ 통계표

세계잉여금 추이

액상지상

단위 : 억원

연도	세계잉여금	지방교부세 및 교부금 정산(억원)	채무상환(억원)	다음연도세입이입 등(억원)
2019	619	619	0	0
2018	106,575	105,292	654	629
2017	100,422	59,762	20,736	19,923
2016	60,920	38,091	11,643	11,186
2015	25,277	0	12,891	12,386
2014	964	0	492	473



2 데이터자료

재정통계 > 상세재정통계DB > 결산 > 세계잉여금

재정통계 > 상세재정통계DB > 결산 >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 현황,

회계별 세입 결산 현황, 회계별 세출 결산 현황

세계잉여금과 관련된 자세한 데이터는 ‘재정통계 > 상세재정통계DB > 결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정통계 > 상세재정통계DB > 결산 > 세계잉여금’에 들어가면 결산 기준의 △일반회계 세입 △일반회계 세출 △결산상 잉여금 △이월액 △세계 잉여금 △지방교부세 및 교부금 정산 △채무상환 △추경재원 △다음연도세입이입 등에 대한 2001년부터 2019년까지의 연도별 규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채무상환은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원 및 국가채무 상환을 포함한 규모를 나타냅니다.

‘재정통계 > 상세재정통계DB > 결산 >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 현황’에서는 일반회계를 포함한 회계별 세입, 세출에 관한 더 자세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07년부터 2019년까지의 연도별로 △회계구분명 △회계명 △계정명 △(세입)예산현액 △(세입)수납액 △(세입)증감액 △(세출)예산현액 △(세출)지출액 △(세출)증감액 △다음연도이월액 △불용액 등의 항목을 제공합니다.

「열린재정」에서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재정데이터명	서비스 유형	공표 시기	생산 기관
소관별 세입/세출 결산 현황 국가통합 중앙관서별 세입세출결산 총괄보고서 정보입니다. (2007회계년도부터...)	SHRST Open API	연간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세입/수입 결산 현황 정부의 세입/수입에 관한 결산정보입니다.	SHRST Open API	연간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세출/지출 결산 현황 정부의 세출/지출에 관한 결산정보입니다.	SHRST Open API	연간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 현황 중앙정부 회계별 세입세출결산 총괄보고서 정보입니다. (2007회계년도부터...)	SHRST Open API	연간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회계별 세입 결산 현황 국가통합 회계별 세입결산보고서 정보입니다. (2007회계년도부터 조회가능)	SHRST Open API	연간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회계별 세출 결산 현황 국가통합 회계별 세출결산보고서 정보입니다. (2007회계년도부터 조회가능)	SHRST Open API	연간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기금별 수입/지출 결산 현황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결산보고서 정보입니다.	SHRST Open API	연간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세계잉여금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차감한 것을 결산상 잉여금이라 하고, 결산상 잉여금 중...	SHRST CHART Open API	연간	기획재정부 국고국

「열린재정」에서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세계잉여금 메타정보보기

SHEET CHART OPEN API

기준년도 선택 조회

XML JSON XLS CSV TXT

No	기준년도	일반회계 세입(억원)	일반회계 세출(억원)	결산상 잉여금(억원)	이월액(억원)	세계 잉여금(억원)	지방교부세 및 교부금 청산액(억원)	채무상환액(억원)	추경채권(억원)
1	2019	3,322,397	3,308,841	13,555	12,936	619	619		
2	2018	3,162,185	2,999,460	122,725	16,150	106,575		105,292	654
3	2017	2,929,006	2,804,840	119,166	18,745	100,422		59,762	20,736
4	2016	2,816,746	2,739,981	76,765	15,845	60,920		38,091	11,643
5	2015	2,619,383	2,578,816	40,567	15,290	25,277			12,891
6	2014	2,392,256	2,363,607	28,649	27,685	964			492
7	2013	2,323,929	2,295,443	28,485	27,673	812			414
8	2012	2,237,034	2,206,878	30,156	21,623	8,533		1,886	3,390
9	2011	2,148,604	2,074,469	74,134	22,849	51,285		19,586	16,167
10	2010	2,052,235	1,971,371	80,864	21,350	59,514		15,817	22,285
11	2009	2,049,475	1,998,760	50,715	14,628	36,087		7,864	14,394
12	2008	1,815,858	1,754,695	61,163	15,400	45,763		2,947	21,836
13	2007	1,711,722	1,543,309	168,413	14,985	153,428		54,133	50,640
14	2006	1,478,667	1,448,360	30,307	16,577	13,730		13,728	
15	2005	1,364,592	1,342,077	22,515	10,148	12,367			3,818
16	2004	1,196,460	1,182,362	14,098	12,372	1,726			
17	2003	1,196,755	1,172,229	24,526	13,264	11,262			
18	2002	1,133,800	1,089,183	44,617	11,756	32,861			

[19 / 19]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 현황 메타정보보기

SHEET OPEN API

회계년도 2019 조회

세부조인 열기

XML JSON XLS CSV TXT

No	회계년도	회계구분명	회계명	계정명	(세입)예산현액(원)	(세입)수납액(원)	(세입)증감액(원)	(세출)예산현액(원)	(세출)지출액(원)
27	2019	기타특별회계	우체국보통특별회계		988,744,000,000	966,364,425,010	-22,379,574,990	988,937,926,780	701,390,97
28	2019	기타특별회계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3,815,338,000,000	4,005,370,155,670	190,032,155,670	3,815,338,000,000	3,815,338,00
29	2019	기타특별회계	주한미군기지사임회계		493,318,000,000	530,783,793,410	37,465,793,410	557,265,292,630	496,955,77
30	2019	기타특별회계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회계		299,737,000,000	366,085,863,110	66,348,863,110	367,504,563,520	348,426,07
31	2019	기타특별회계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264,632,000,000	278,329,950,050	13,697,950,050	264,731,363,630	232,616,82
32	2019	기타특별회계	환경개선특별회계		5,807,508,000,000	6,027,980,257,530	220,472,257,530	5,928,549,264,960	5,732,627,71
33	2019	일반회계	일반회계		334,659,834,900,000	332,239,671,912,911	-2,420,162,987,090	336,299,385,620,400	330,884,136,6
34	2019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경찰병원	순익계정	78,291,000,000	80,907,919,820	2,616,919,820	78,291,000,000	71,978,72
35	2019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경찰병원	자본계정	2,541,000,000	3,008,752,870	467,752,870	2,541,000,000	2,418,06
36	2019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국립공주병원	순익계정	14,918,000,000	16,297,822,490	1,379,822,490	14,957,462,000	14,065,22
37	2019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국립공주병원	자본계정	1,377,000,000	1,425,268,200	48,268,200	1,377,000,000	1,224,52
38	2019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국립과천과학관	순익계정	27,408,000,000	27,961,541,810	553,541,810	27,408,000,000	26,596,11
39	2019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국립과천과학관	자본계정	6,998,000,000	7,219,470,410	221,470,410	7,047,650,000	6,259,47
40	2019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국립나주병원	순익계정	20,333,000,000	22,345,956,500	2,012,956,500	20,528,831,000	18,755,16
41	2019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국립나주병원	자본계정	1,533,000,000	2,105,917,630	572,917,630	2,054,285,890	1,995,32
42	2019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국립마산병원	순익계정	13,730,000,000	16,780,366,690	3,050,366,690	13,856,030,000	12,964,96
43	2019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국립마산병원	자본계정	5,985,000,000	8,830,716,210	2,845,716,210	5,985,000,000	5,951,36
44	2019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국립목포병원	순익계정	10,313,000,000	12,236,674,250	1,923,674,250	10,313,000,000	9,276,84



3
기타 정보

관련법령 → 재정자료실 > 재정법령 > ‘국가재정법’ 검색
정부정책 → 재정자료실 > 보도자료 > ‘세계잉여금’, ‘총세입·총세출’ 검색

‘재정자료실’에서는 세계잉여금과 관련된 재정법령과 최근 보도자료를 제공합니다. ‘재정자료실 > 재정법령’에서는 ‘국가재정법’을 확인할 수 있으며, 세계잉여금의 정의와 처리 방법, 절차 등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세계잉여금과 관련한 재정당국의 주요 발표자료는 ‘재정자료실 > 보도자료’에서 ‘세계잉여금’으로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총세입’, ‘총세출’ 또는 ‘교부금 정산’ 등의 키워드로 검색하면 각 회계연도의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에 따른 세계잉여금 규모와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처리 계획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열린재정」에서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재정법령

총 2건

선택 ☐ 국가재정법

번호	법령명 ▲	법령종류
2	국가재정법	법률
1	국가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보도자료

총 14건

세계잉여금

제목	장부	담당부서	등록일자	조회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처리계획		국고과	2013-04-09	2
(보도참고)「세계잉여금」으로 재정건전성을 판단하...		재정관리총괄과	2013-02-13	1
세계잉여금 중 지방 교부세 및 교육교부금 정산분...		국고과	2012-05-14	14
2011년도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처리		국고과	2012-04-10	4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처리 관련 안...		국고과	2012-02-10	1
2010년도 세계잉여금 처리		국고과	2011-04-05	0
2009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처리		국고과	2010-04-07	0
[보도해명] 2009.12.21 국민일보 공기업 매각차익...		예산제도과	2009-12-21	0
2008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처리		국고과	2009-03-27	2
2007년도 세계잉여금 중 지방교부세 등 정산분 5...		국고과	2008-04-28	2

「열린재정」에서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총 21건

총세입

검색

제목	첨부	담당부서	등록일자	조회
2020회계연도 총세입 · 총세출 마감 결과		회계결산과	2021-02-09	6
2019회계연도 총세입 · 총세출 마감결과		회계결산과	2020-02-10	56
2018 회계연도 총세입부 · 총세출부 마감		회계결산과	2019-02-08	42
2012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부 마감		회계결산과	2013-02-08	6
2011회계연도 총세입부 · 총세출부 마감		회계결산과	2012-02-13	2
2010회계연도 총세입부 총세출부 마감		회계결산과	2011-02-10	2
2009회계연도 총세입부총세출부 마감		결산과	2010-02-10	1
2008회계연도 총세입부 · 총세출부 마감		결산과	2009-02-10	1
2007회계연도 총세입부 총세출부 마감		재정정보과	2008-02-05	3
2006회계연도 총세입부, 총세출부 마감		재정정보관리과	2007-02-12	1
2005년 총세입부 총세출부마감 관련 추가설명		재정정보관리과	2006-02-13	0

총 3건

교부금 정산

검색

제목	첨부	담당부서	등록일자	조회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금 10.5조...		국고과	2019-04-05	22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금 6조원 ...		국고과	2018-04-06	16
세계임여금 중 지방 교부세 및 교육교부금 정산분...		국고과	2012-05-14	15



이달의 이슈키워드

학교 폭력

문화체육관광부가 운영하는 정책여론수렴시스템의 데이터분석 결과, 지난 한 달 동안 ‘학교폭력’ 언급량이 큰 폭으로 늘었다. 프로배구선수가 중학교 때 동료선수를 괴롭혔다는 폭로가 사실로 드러나며 이른바 ‘학폭 미투’가 스포츠계를 넘어서 사회 전 분야로 확산하고 있다. 이에 올해 초 정부에서 발표한 「2020년 학교폭력 실태조사」가 재조명 된것으로 보인다. 연관 키워드로는 ‘학생’, ‘가해자’, ‘피해자’ 등이 도출됐다. 이번 호 「나라재정」에서는 올해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정부의 재정사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본다.

서영훈 재정정보분석본부 연구원(youngseu@kpfis.or.kr)



연관어

학생 — 가해자 — 피해자 — 친구 — 학교 — 폭력 — 고발 — 선수 — 피해자들 — 폭로 — 사건 — 문제 — 국가대표 — 예방

정부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년 2번에 걸쳐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결과, 지난해 학교폭력에 피해를 봤다는 학생은 0.9%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3년만에 최저치를 나타냈지만 여전히 학생 100명 중 한 명이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했다는 것이다. 학교 급별로는 초등학교 1.8%, 중학교 0.5%, 고등학교 0.2%로 초등학교에서 학교폭력을 경험한 학생들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유형으로는 언어폭력(33.6%), 집단 따돌림(26.0%), 사이버폭력(12.3%)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사이버폭력과 집단 따돌림은 2019년 대비 각각 3.4%p, 2.8%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는데 201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다.

학교폭력 피해유형별 응답률

(단위: %)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언어폭력	34.0	34.6	33.3	34.0	34.1	34.7	35.6	33.6
집단 따돌림	16.6	17.0	17.3	18.3	16.6	17.2	23.2	26.0
스토킹	9.2	11.1	12.7	10.9	12.3	11.8	8.7	6.7
신체폭력	11.7	11.5	11.9	12.1	11.7	10.0	8.6	7.9
사이버폭력	9.1	9.3	9.2	9.1	9.8	10.8	8.9	12.3
금품갈취	10.0	8.0	7.2	6.8	6.4	6.4	6.3	5.4
성폭력	3.3	3.8	4.2	4.5	5.1	5.2	3.9	3.7
강요	6.1	4.7	4.2	4.3	4.0	3.9	4.9	4.4

자료: 교육부(2021), 「2020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정부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학생의 안전을 지원하기 위해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20)」을 수립했다. 제4차 기본계획은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한 학교문화 조성 △학교의 신뢰 제고 △가정과 사회의 역할 강화 등에 초점을 두었다.

학교폭력 예방 관련 예산

(단위: 억원)

관련 사업	주요 내용	지출액
인성교육진흥사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인성교육 프로그램 인증	4.2
국립부설학교 역량강화 지원	학생상담, 학교안전 강화	593.0
전국학부모지원센터 운영 지원	부모 교육역량 강화	2.8
교육정책이해도 제고	학교폭력 근절 홍보	19.4
특수교육 내실화 기반 구축	장애학생 인권 보호	137.3

자료: 교육부(2021), 「2021년도 주요사업비 설명자료」 재구성

● 인성교육진흥사업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학교 내에 존중과 배려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인성교육진흥사업에 4.2 억원이 편성됐다. 초·중·고 학생뿐 아니라 교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학교현장 상황에 맞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현장에 보급하고,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매년 인성교육 추진성과 및 활동에 관한 평가를 통해 차년도 인성교육 계획에 반영하고 정책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이렇게 개발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잘 활용할 수 있는 환경도 지원하고 있는데, △전문인력 양성기관 △인성교육 프로그램 인증제 등을 운영하고 있다.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통해 현직 교원들을 중심으로 인성교육 전문가를 양성하여 학생들이 접하기 쉬운 학교 교육을 통한 인성교육의 활성화를 지원한다. 인성교육 프로그램 인증제는 공모를 통해 접수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심사하여 선정·인증한다. 유아,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인증 대상이다.

● 국립부설학교 역량강화 지원

국립부설학교 역량강화 지원을 통해서도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2021년 593.0억원을 편성하여 학생상담, 학교안전 강화 등을 운영한다. 학교폭력 앞에 놓인 학생을 상담하고 이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Wee(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Wee클래스(학교), Wee센터(지역교육청), Wee스쿨(시·도교육청) 단위로 운영하여 학생들의 상황에 맞게 운영하고 있다. 학교 내에서 학교폭력으로 인해 어려움이 있는 학

생을 Wee클래스에서 상담,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해당 학생을 지원한다. 이후 해당학생을 단위학교에서 치유하기 어려운 경우 Wee센터를 통해 전문가의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진다. Wee스쿨에서는 학교나 Wee센터에서 의뢰한 학생, 심각한 위기상황으로 장기적인 치유가 필요한 학생에게 기숙형 장기위탁교육을 실시한다.

학교안전 강화로 국립학교에 고화질(200만 화소 이상)의 CCTV를 설치하고 있다. 특히 신축 건물, 사건·사고 발생지역 등에 신규 CCTV를 설치하고 있으며, 노후화된 CCTV도 교체하고 있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학교 내 지능형 CCTV를 설치하여 시범운영 중에 있다. 지능형 CCTV를 통해 학교 내 침입, 배회, 방화 등을 사전에 인식하여 학교담당자에게 알려준다. 이를 통해 학교 내 폭력, 화재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 전국학부모지원센터 운영 지원

학교폭력의 예방은 학교 교육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가정, 사회의 역할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2.8억원을 편성하고, 학부모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하여 자녀교육에 함께하는 환경을 제공한다. 특히 전국학부모지원센터를 통해 인성교육, 부모 역량강화, 부모 자녀 관계 등 가정에서 이루어질 관련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학부모On누리 홈페이지(www.parents.go.kr)를 통해 해당 콘텐츠가 제공되고 있는데, 자녀의 연령, 상황 등에 맞는 강의를 신청하여 들을 수 있다. 또한 센터에서 발간하는 교육자료, 웹진, 연구자료 등을 제공하고 있다.

● 교육정책이해도 제고

정부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학교폭력 근절, 건전한 교육관 캠페인 등과 같은 주요 정책정보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교육정책이해도 제고 사업에 19.4억원을 편성했다. TV, 소셜미디어, 블로그 등을 통해 학교폭력 등과 같은 교육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월간지인 「행복한 교육」을 통해 교육정책 정보, 교육뉴스 등 다양한 교육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 시대에 맞춰 교육정책 수요자와 쌍방향 소통을 추진하고 있는데 유튜브, 페이스북, 카카오톡스토리 등 다양한 온라인 소통 채널을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 특수교육 내실화 기반 구축

일반학생보다 불리한 교육 여건에 놓여있는 장애학생에 대한 지원을 위해 정부는 2021년 137.3억원을 특수교육 내실화 기반 구축 사업에 편성했다. 특히 올해부터 「특수교육대상자 인권 실태조사」를 통해 장애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 침해를 감지할 계획이다. 실태조사는 전국 특수교육대상자, 학부모, 교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실시한다.

또한, 통합교육 여건을 조성하고 아울러 장애공감문화 확산을 위해 교육자료를 개발하고 배포한다. 이를 통해, 장애·비장애 학생 모두에게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장애학생 인권을 보호하는 환경을 마련한다. 교육부는 에듀에이بل 사이트를 통해 장애공감 추천자료, 인권교육 교육자료 등을 제공한다.



모바일 공무원증과 자기주권 신원증명

dBrain운영본부 기술지원부

정부의 <한국판 뉴딜>은 데이터를 중심에 놓고 새로운 성장문법을 모색하는 전략이다. 본 코너는 데이터와 관련한 신기술, 정부 정책, 데이터 댐, 산업동향 등을 전한다. 미국의 뉴딜정책이 값싼 공공재(Electricity for All)로 만들어 공장·가정에 공급했듯이, 본 코너는 누구나 공공데이터를 쉽게 활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모두를 위한 데이터’(Data for All)를 꿈꾼다. 이번 호에서는 디지털 뉴딜의 지능형 정부 과제에 포함된 모바일 공무원증과 자기주권 신원증명에 대해 다뤄본다.

지난 1월 28일 행정안전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모바일 공무원증 사업 완료 보고회를 열었다. 모바일 공무원증은 ‘전 국민 대상 모바일 신분증 도입을 위한 시험무대’로 추진됐으며, 사업 완료와 함께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모바일 공무원증은 스마트폰에 설치하는 어플리케이션 형태로 제공이 되며 공무원증 제시가 필요할 때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신분을 증명할 수 있고 청사 및 스마트워크센터도 스마트폰 공무원증으로 출입이 가능하다.

또한 행정전자서명(GPKI) 없이도 스마트폰의 공무원증을 이용해 공직자 통합메일, 바로톡 등 업무시스템에 로그인 할 수 있다. 온·오프라인에서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신분증인 것이다.

모바일 공무원증 발급 계획

2월	세종·서울청사 26개 기관 1만 5,000명
4월	대전·과천청사 중앙행정부처 7만명
6월	중앙부처 소속기관 13만여 명
하반기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기관별 모바일 공무원증 서비스 구현 지원

모바일 공무원증의 도입과 서비스 시작은 본격적인 모바일 신분증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라 할 수 있다. 모바일 공무원증 서비스를 운영하며 기술적 보완 및 검증과정을 거친 후 올해 말 전 국민을 대상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서비스할 예정이며 이후 주민등록증, 장애인 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청소년증, 외국인등록증 등 국가가 발행하는 신분증에도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는 모바일 신분증이 '자기주권 강화'의 의미를 지닌다고 했는데, 데이터 소유권 측면에서 주목할만하다.



'자기주권 강화'는 자기주권 신원증명(SSI, Self-Sovereign Identity) 개념의 적용을 의미한다. 자기주권 신원증명은 이전과 다르게 개인이 직접 자기의 정보를 보유하고 신원을 인증하는 방식이다. 지금까지는 계정을 발급해주는 기업(기관)에서 개인 정보를 보유하고 개인의 신원을 인증해주었는데, 이러한 방식은 데이터 소유권에 있어서 논란이 있다. 서비스 이용 중에 발생한 개인의 활동 정보까지 기업(기관)에서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데이터는 21세기의 원유라고 할 만큼 그 가치가 무궁무진하다. 특히나 사용자가 어디서 어떤 서비스를 얼마나 이용하는지와 같은 활동 정보는 사용자 맞춤형 마케팅 정보를 생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의 이익 활동에 지대한 공헌을 할 수 있다. 많은 기업들이 탐을 낼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정보인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정보를 정작 생산 주체인 개인이 소유하지 못하고 기업이 소유하는 것은 문제로 인식됐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자기주권 신원증명이 대두된 것이다.

자기주권 신원증명을 실현해주는 기술은 DID(Decentralized Identity, 탈중앙화 신원증명)인데 블록체인 기반이다. 특정 기업이나 기관이 데이터를 보유하지 않는 블록체인의 탈중앙화 특징이 자기주권 신원증명의 근간이 되는 것이다.

모바일 공무원증은 데이터에 대한 자기주권 신원증명의 본격적인 시작이라 볼 수 있다. 최근에는 EU의 개인정보보호법(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과 우리나라의 데이터3법 등으로 마이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자기주권 신원증명을 도입한 서비스의 출현은 이목을 끌기에 충분하다. 또한 이제껏 블록체인은 시범 서비스가 주를 이루었는데, DID 기반의 모바일 공무원증은 블록체인의 상용 서비스 개통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남다르다.

참고 문헌

- 행정안전부(2021.01.12.), '모바일 공무원증 시대 열렸다'...연말엔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 URL: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82529>
- Coindesk KOREA by 한겨레, 정인선(2020. 10. 15.), 'DID 적용한 '모바일 공무원증'이 올해 나온다', URL: <https://www.coindesk.com/news/articleView.html?idxno=71810>
- 신동아, 유성민 IT칼럼니스트(2020. 8. 6.), '공인인증서 퇴장, 신원인증 시장 국가 독점 끝', URL: <https://shindonga.donga.com/Series/3/990349/13/2141014/1>

산업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는 애자일(Agile) 안양

Interview



최 대 호

안양시장

최근 많은 기업에서 새로운 경영방식으로 '애자일(Agile)' 조직문화가 떠오르고 있다. 애자일이란 '기민한', '민첩한'이라는 뜻으로 사무환경에서 부서 간의 경계를 허물고 직원에게 의사 결정 권한을 부여해 신속하게 업무를 진행하는 방식을 뜻한다. 이러한 조직문화 개혁방식은 사기업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번 호는 한국행정학회에서 발표되었던 애자일 성과사례를 시장을 만나 들어봤다.

글: 정재림 일러스트: 강태이

빠른 변화에 대응하는 빠른 행정

안양시는 90년대에 1기 신도시 건설로 인구가 집중되어 최고의 부흥기를 누렸다. 그러나 13개의 대기업과 8개의 공공기관이 이전하면서 도시경쟁력이 악화됐다. 다시 활기찬 도시로 재도약하기 위해 안양시는 다방면의 준비를 시작했다. 그 결과 1990년부터 산업집적시설 조성을 시작으로 41개소의 지식산업단지를 입지(2개소 2022년 준공 예정)시켰다. 또한 지식산업센터에 4,525개의 기업이 입주했다.

안양시는 기업이 지역경제의 성장 동력을 이끌어 간다는 점에 집중했다.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부분은 '빠른 변화, 느린 행정' 문제였다. 산업 트렌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경계를 허물고 이른바 '경제의 붕괴', '경제의 융복합' 변화를 겪고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에도 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시스템의 문제를 먼저 극복해야 했다.

* 코로나19로 인하여 서면 인터뷰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동안 이어온 공무원의 워터폴(Waterfall) 조직¹ 방식으로는 산업트렌드 변화의 속도에 맞추기 어렵다고 판단됐다. 이에 애자일 조직을 구성하고 기업이 신산업기술 현장에서 겪고 있는 규제를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시작했다.

안양시청의 애자일 조직은 소수정예 팀장을 주축으로 한다. 팀장이 직접 추천한 업무능력과 규제개혁 마인드를 가진 직원 4인으로 이루어진 규제개혁팀이 구성됐다. 근무 연수와 직급, 직렬을 타파한 능력 중심의 조직으로 ICT 기업처럼 자유롭고 애자일한 의사결정권을 지니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공무원 조직의 정책결정은 기획단계에서부터 수십 차례의 검토와 보고를 통해 이루어져 왔습니다. 안양시의 애자일 조직은 팀 내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중요한 부분만 사후에 보고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 최종 결정권자인 저도 일 년에 한두 번씩 최종결과만 보고받는 정도입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안양시 애자일 조직에 대한 강한 신뢰를 내비쳤다.

애자일 성과 사례

① 의약품 주입펌프 13조 세계시장 진입

2005~2009년에 의약품 주입펌프가 약 5만 6천 건의 부작용을 일으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연속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 안양시 관내 기업 메인텍㈜는 감염요인을 차단하고 주입량 오차를 개선하여 전 세계 의약품 주입펌프의 시장 판도를 바꿀 수 있을 만한 혁신적인 원천 기술로 실린더 카트리지를 개발했다. 그러나 의약품 품목이 없고 급여도 지정되지 않아 단 한 대도 판매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안양시가 2017년부터 중앙부처 건의 10회, 규제샌드박스 밀착 지원 15회, 과제보완 30회 등 규제 개선 노력으로 의약품 품목 신설과 급여가 도입되었고 마침내 13조 규모의 세계시장에 진입하게 되었다.

¹ 워터폴(Waterfall) 조직이란 ‘폭포수’라는 뜻으로 미리 정해진 요구 사항을 바탕으로 프로세스가 순서대로 진행되는 방식을 말한다. 각 단계에서 요구 사항의 변화나 문제가 발생했을 시 커뮤니케이션이나 협업을 통한 유연한 대처가 어렵다.

② 사람 살리는 신기술 Smart AED 18조 세계시장 진입

응급심정지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AED는 설치가 법제화되어있다. 그러나 비전문 인력 중심의 비효율적인 관리로 위급상황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들이 발생했다. 루씨엠(주)가 이러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IoT를 접목하여 부실의 원인이 되는 13가지 에러 요인을 대용량으로 체크해주는 Smart AED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특허를 획득한 우수 기술임에도 규제에 막혀 시장진입을 못 하고 있던 루씨엠(주)는 안양시가 규제샌드박스 전 과정에 밀착 지원하여 임시험가 1호 인증으로 18조 규모의 세계시장 진입에 성공했다. 이후에도 공공시장 진입을 위한 조달규제 개선 등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를 해소하여 기업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③ 시범운행지구 내 자율주행자동차 성능 및 부품의 안전기준 규제 완화

자율주행 선도 기업 (주)SWM.AI는 테스트를 위해 수입한 버스가 일반도로에서는 주행이 불가능한 문제에 직격했다. 이에 전문가 자문 10회,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중소벤처기업부 등 안양시의 10차례에 걸친 규제 개선(시범운행지구 내 자율주행자동차 성능 및 부품의 안전기준 규제 완화)으로 2019년 6월 서울 상암 자율주행 페스티벌 5G 자율주행 시연에 성공했다.(월드컵북로 1.1 km 구간 운행)

④ 스마트팩토리² 공급기업 POOL 등록 규제 완화

클라우드 기반의 스마트공장 솔루션 제공 기업 울랄라랩은 주요 생산 효율과 작업 연속성을 보장하면서 설비 예지 보전까지 가능했다. 하지만 신기술 솔루션과 스타트업이라는 이유로 공급기업 POOL 등록 요건에 충족하지 못해 등록할 수 없었다. 스타트업에게 무리한 솔루션 요건, 인적 요건, 사업실적, 재무제표를 요구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안양시는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POOL 등록 요건 완화를 위하여 10여 차례의 간담회와 건의를 통해 규제를 개선했고, 스마트팩토리 솔루션 공급기업은 10배 이상(215개→2,214개) 상승했다. 울랄라랩의 매출도 10배 이상 증가했으며 해외 나이키 등 세계시장에도 진출하여 눈부신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² 설계·개발, 제조 및 유통·물류 등 생산과정에 디지털 자동화 솔루션이 결합된 정보통신기술(CT)을 적용하여 생산성, 품질, 고객만족도를 향상시키는 지능형 생산 공장을 말한다.

⑤ 신호등의 시인성과 소요 전력의 획기적 개선 제품 시장진입 규제 개선

주변 환경의 조도를 센서로 감지하여 신호등 램프의 광도를 자동으로 조절해 소요 전력을 절감하고 시인성을 개선한 ㈜필오나는 그린 뉴딜 신기술 ‘센서형 조도감응방식 LED 신호등 램프’를 개발하여 특허를 취득했다. 그러나 성능평가 규격이 없어 개발 후 7년간 시장 진입이 불가능했다. 안양시는 2년간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 3회 밀착 지원, 중앙부처 규제개선 건의 5차례, 경찰청과 직접 협상 12회 등의 노력으로 ‘LED 교통신호등 표준지침’에 신제품 성능평가 규격을 신설했다. 또한 신기술 센서형 조도감응방식 LED 신호등 성능평가 규격을 신설하는 등 중첩 규제를 개선했다. 센서형 조도감응방식 LED 신호등은 2천억 규모의 시장 신기술 독점 진입 기회를 확보했다.

애자일한 조직을 이끌어가기 위한 노력

사기업보다 비교적 조직 운영이 유연하지 않은 공공부문에서 애자일 조직을 운영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최대호 시장은 애자일 조직 구성과 운영이 결코 쉽지 않은 일임을 강조했다. “공무원 조직, 특히 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조직이나 인력 운영에 대해 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유롭지 못하지요. 또한 사기업에서는 성과를 낸 직원들에게 인센티브와 보상을 당연시하고 있지만, 공무원은 성과에 대한 평가시스템이 명확하지 않고 연공서열을 중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큰 과실이 없으면 정년이 보장되는 공직문화에서 낫설고 어려운 문제에 도전하겠다는 능력과 의지를 겸비한 조직원을 선발하는 것 또한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최대호 시장은 애자일 조직 구성원의 성과를 인정하여 전국 최초로 특별승진 사례를 배출했지만 아직도 도전은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애자일 조직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딜레마는 명확한 해결방법이 없어서 추후에 더욱 지자체의 조직 운영 자율성이 확대될 때까지 안양시 직원들을 믿고 나아가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규제를 발굴하고 대응 논리를 마련해 성과를 낸 조직원에 대한 보상 시스템과 조직 내의 의사결정 과정에 최대한 자율성을 확대하는 것. 그리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예산 지원을 시행하여 앞으로 더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양시는 외형은 행정기구이지만 운영은 애자일한 공공부문 애자일 조직의 한 예시가 되었다. 최대호 시장은 안양시 전 조직이 민첩하고 유연한 네트워크를 갖춘 애자일 조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앞으로의 목표라며 포부를 밝혔다.

6·25 전시재정: 임시토지수득세와 재정법

글. 옥동석 인천대학교 교수, 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dsoak@naver.com)



1950년 6월 25일 북한 공산집단의 기습 남침은 이제 막 돌을 지나 걸음마를 시작한 대한민국 정부의 모든 희망을 앗아가 버렸다. 해방 이후 처음으로 균형예산을 편성하며 초인플레이션 극복을 위해 기울인 경제안정의 노력들은 모두 수포로 돌아갔다. 7월부터 10월까지 정부는 대전, 대구, 부산을 전전하며 ‘사변수습 비상경비예산’을 월별로 편성 집행하여 75% 이상을 군사비로 그 나머지는 피난민 구호비, 치안비에 투입했다¹. 그 재원은 전액 통화증발로 조성됐고, 특히 7월부터는 ‘유엔군 경비지출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어 ‘유엔군 대여금’ 형식으로 전쟁경비를 위한 통화증발을 계속했다².

정부지출과 유엔군 대여금이 급증하며 1950년 6월 25일부터 1951년 3월 말까지 은행권 발행 규모가 약 500% 팽창했다. 이 기간 중 임시수도가 있었던 부산의 소매물가지수 역시 약 480% 증가했다³. 전쟁 초기부터 통화증발과 인플레이션이 격심해지자 정부는 1951년도 예산을 통화증발 없이 운용하고자 전력을 다했다. 전시(戰時)세제의 도입, 전매익금(특별회계 전입)의 증대, 국채의 강제소화 등 비(非)-인플레이션 세입수단을 총동원했다.

전쟁 기간 중 균형예산 달성

정부의 노력들은 상당한 성과를 보이며 1951년과 1952년에 차입금이 완전히 폐지된 균형 예산을 달성할 수 있었다. 조세수입의 세입 내 비중은 1950년 17.2%에서 1951년 60.1%

¹ 김영윤(1986), “재정적자의 누증과 전시조세체제,” 『한국경제정책40년사』, 전국경제인연합회편, pp.242.

² 북한 공산집단은 미발행 및 악탈한 조선은행권으로 경제교란 작전을 펼치기도 했다. 정부의 통화조치 관련 내용은 김유택(1970), “화폐개혁 시말기” 한국전쟁 20주년 특집, 『신동아』, pp.209-213 참조.

³ 한국은행(1955), 『4288년판 경제연감』, pp.1-33.

로 획기적으로 증가했고, 전매사업 잉여금의 일반회계 전입도 1950년 13.8%에서 1952년 30.7%로 크게 증가했다. 1949년에 처음 도입했던 건국국채도 1951년에 다시 발행하며 행정력을 동원하여 금융기관과 일반 국민들에게 강제 소화했다.

전쟁 중임에도 균형예산을 달성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막대한 규모를 차지하던 유엔군 전쟁경비가 정부예산에 포함되지 않고 한국은행 계정으로 처리됐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유엔 참전국들의 물자·용역 구입과 수송에 소요되는 원화경비를 직접 대여했다. 유엔군 대여금은 1951년 9월까지 전혀 상환되지 않았기에 전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됐다. 그 규모는 개전 이후 1951년 3월 말까지 국군 군사비의 14배에 달했다⁴.

〈표 1〉 일반회계(결산) 세입추이(1950~1953년)¹⁾

(단위: 백만원 - 1953년 화폐단위)

항목	1950년	1951년	1952년	1953년
조세	427.7(17.2)	3,924.3(60.1)	9,660.0(43.2)	20,566.0(37.1)
인지수입	6.6(0.3)	28.5(0.4)	118.3(0.5)	396.5(0.7)
관업·관유재산 수입	2.6(0.1)	6.8(0.1)	666.0(3.1)	1,463.8(2.6)
농지대가 상환금	30.1(1.2)	306.1(4.7)	-	-
잡수입	16.5(0.6)	221.2(3.4)	287.0(1.3)	743.5(1.3)
특별회계 전입	344.5(13.8)	1,646.3(25.2)	6,791.0(30.7)	9,676.7(17.4)
국채	-	400.0(6.1)	1,202.9(5.5)	2,000.0(3.6)
차입금	1,525.7(61.5)	-	-	20,200.0(36.4)
기타 ²⁾	131.5(5.3)	-	3,392.8(15.4)	459.1(0.8)
합계	2,485.3(100.0)	6,532.2(100.0)	22,118.0(100.0)	55,505.6(100.0)

주 1) 전란수습특별회계와 국채금특별회계를 포함

2) 1950년도는 경제부흥원조수입, 1952년도는 전년도 이월과 타계정전입, 1953년도는 전년도 이월

3) 괄호 안의 숫자는 합계 대비 각 항목의 비중을 의미

자료: 한국재정40년사편찬위원회, 「제6권 재정운용의 시대별 분석」, 한국개발연구원, p.112

유엔군 대여금 상황은 1951년부터 한·미 간의 첨예한 쟁점이 됐는데 어떤 환율을 적용할 것인가가 가장 큰 문제였다. 미국 측은 시장환율을, 한국 측은 정부가 정한 법정환율을 각각 주장했다. 유엔군 대여금은 한국은행이 1954년까지 달러로 상환받음으로써 전쟁 직후 경제부흥의 밑거름이 될 수 있었다. 1953년 말까지 유엔군 대여금 총액은 184억환(圓)에 달했으나 이때까지 거의 전액을 미국 달러화로 1억 9,622달러 상환받았다⁵.

휴전이 가시화되면서 1953년도 예산은 야심적인 경제부흥을 위하여 다시 대규모 적자재정

⁴ 유엔군 대여금 관련 통계는 한국은행, 「4288년판 경제연감」, 통계편 pp.107 참조.

⁵ 미국은 애당초 대여금을 상환할 생각이 없었으나 한국의 외교적 노력으로 상환받게 됐다. 관련 내용은 최상오(1999), 「경제안정의 지향과 한·미 간 환율논쟁」, 「경제사학」 26권, pp.39-70.



으로 회귀했다. 물론 전쟁의 피해로 세원이 고갈됐기 때문에 조세징수, 국채소화도 한계점에 도달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언제 다시 전쟁이 재발할지 모르는 휴전상태였기에 군사비와 치안비는 계속 증가했다.

양곡 물납의 임시 토지수득세

한국전쟁 기간 중 정부는 세율인상, 과표 현실화, 세원 확대, 세무행정 강화, 조세범 처벌 등 세수 증가를 위한 모든 조치들을 강행했다. 특히 1951년에는 ‘임시토지수득세법’을 제정했는데 당시에 이 법률은 ‘재정법’과 함께 ‘한국 재정사에서 획기적인 2대 법률’로 간주됐다⁶. 토지수득세는 정부가 막대한 양의 군량미와 공무원에 대한 배급미곡을 확보하고자 현물의 양곡세를 징수하는 것이었는데 농민에게 부과하던 기존의 현금납부 세금들은 모두 폐지됐다. 만약 양곡시장이 안정되어 있었다면 농민들은 수확기에 양곡을 매각하여 수령한 현금으로 조세를 납부하고 정부는 이 현금의 조세수입으로 필요한 양곡을 구매하면 될 일이었다. 그러나 양곡가격은 매우 불안정했고 양곡수매에서는 대량의 통화발행이 불가피했으며 또 전시의 시급한 상황을 감안할 때 정부로서는 양곡의 물납 외에는 다른 방법을 강구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토지수득세를 통해 정부는 양곡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기에 전쟁 수행

⁶ 한국산업은행(1961), 『한국산업경제10년사』, pp.379.

뿐만 아니라 행정기능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전쟁기간 중 흉작이 계속되며 정부의 수집목표 물량이 가혹하여 그 세율에 대해 국회에서 많은 논란이 이어졌다⁷. 예산에서는 토지소득세 금액이 정부의 법정가격으로 평가되어 조세수입의 22.4%(1953년)로 평가되지만, 실제 시장가격을 적용하면 42% 수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⁸. 정부는 마을 단위별로 목표치를 정하여 행정관청과 경찰 등 물리력을 동원하여 수납을 독려했다. 토지소득세의 과중한 부담은 1950년에 단행됐던 농지개혁의 대가 상환을 지연시킴으로써 지주들에게도 엄청난 손해를 끼쳤다⁹.

농지개혁은 개인이 소유한 농지를 정부가 강제로 구매하여 농민들에게 매각 분배하는 것이었다. 당시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소련 공산주의의 위협을 막기 위해 농지개혁을 통해 악랄적인 봉건적 토지소유를 타파하고자 했다. 미군정은 1945년 10월에 ‘최고 소작료를 경정의 건’을 통해 소작료의 대폭 인하를, 1945년 12월에 ‘한국 내 소재 일본인 재산권 취득에 관한 건’을 통해 일본인 소유재산을 귀속재산(또는 적산)으로 몰수를, 그리고 1948년 3월에 ‘귀속 농지 매각령’을 통해 제1차 농지개혁을 단행했다. 미군정은 농지의 매수 및 매각가격을 연간 생산물의 300%로 책정하고 농민들이 연간 20%씩 15년간 곡물로 분납하도록 했다.

정부 수립 이후인 1950년 3월에는 귀속농지가 아닌 한국인 지주의 농지에 대해서도 농지개혁이 단행됐다. 3정보를 초과하는 개인의 농지에 대해 정부는 연간 생산물 150%의 지가증권을 발급하고 농민들로부터는 매년 30%씩 5년간 분납으로 양곡을 상환받았다. 정부는 이들의 회계를 위해 1950년 2월에 ‘귀속농지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했고 1952년부터는 ‘농지개혁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귀속농지관리계정’과 ‘농지대가계정’을 구분했다.

그런데 한국전쟁과 인플레이션 상황 속에서 정부가 발행한 지가증권은 그야말로 헐값으로 전락했다. 지가증권의 액면은 양곡 물량으로 표시됐으나 정부는 양곡의 시장가격이 아닌 법정가격으로 환산한 현금으로 지급했다. 더구나 정부는 이러한 금액조차도 지주들에게 제때 지불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많은 지주들이 생활비 마련을 위하여 지가증권을 헐값에 매각함으로써 사실상 몰락의 길을 걸었다. 일부 발 빠른 지주들은 지가증권으로 귀속기업을 불하받으며 산업자본가로 변신했으나 이들은 극히 일부에 그쳤을 뿐이다.

이처럼 ‘임시토지소득세’와 ‘농지대가’는 한국의 전통적 사회구조를 밑바닥부터 근본적으로 변혁시켰다. 대부분의 지주들이 몰락함으로써 계층의 상승은 자식들에 대한 교육을 통해 할 수밖에 없었고 농민들은 가혹한 소작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으나 전비를 사실상 부담하며

7 김소남(2001), “1950년대 임시토지소득세법의 실시와 농가경제의 변화”,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23.

8 김명윤(1986), “재정적자의 누증과 전시조세체제,” 『한국경제정책40년사』, 전국경제인연합회편, pp.254.

9 토지소득세를 체납하면 강제집행이 이루어졌지만 분배농지의 대가상환을 미납하면 소송만 제기됐을 뿐이다. 김성호 외(1989), 「농지개혁사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pp.689.

힘든 생활을 영위할 수밖에 없었다. 반면 정부는 토지소득세와 농지개혁을 통해 확보한 양곡으로 막대한 잉여를 얻으며 전비를 조달할 수 있었다¹⁰.

재정에 관한 기본법의 제정

또한 정부는 1951년에 재정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재정법’을 제정했다. 일제와 미군정 시대를 거치며 중복 및 혼란스럽게 적용되던 제반 재정규칙들을 통일적인 체제로 정비했다. 해방 이후 미군정청은 ‘구 일본 총독부의 행정제도가 대체로 논리적으로 타당하며 실제로 유용하다’는 이유로 일제의 제도를 그대로 채택했다¹¹. 1948년 7월에 공포된 제헌헌법에서도 ‘기존 법령 중 신헌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것은 계속하여 그 효력을 가진다’는 조항을 규정하여 재정에 관한 일제와 미군정의 각종 법령, 훈령, 통첩 등이 병용되고 있었다.

당시의 시급한 재정현안은 재정규모의 급증을 막는 데 있었다. 해방 후 경제백서로 발간된 「한국산업경제10년사」에서는 재정규모의 추이를 ‘총재정수요’ 측면에서 파악하고자 했다. 이는 국민부담을 유발하는 재정수요의 규모를 측정하고자 한 것으로서 특별회계와 ‘일반회계 내 관업(官業)’의 흑자를 세입으로 그리고 그 적자를 세출로서 파악했다. ‘총재정수요’가 실질규모에서 또 국민소득 대비 비율에서 1953년부터 급증하는 현상을 강력하게 경고했다.



¹⁰ 농지개혁에 대해 잘 정리된 자료로는 박명호(2013), “한국의 농지개혁”, 2012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KDI 국제정책대학원, 기획재정부 참조.

¹¹ Meade, E.G.(1952), American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Kings Crown Press, New York, pp.53-75.

〈표 2〉 재정규모의 추이(결산기준: 1948~1954년)

(단위: 백만원 - 1953년 화폐단위)

회계연도	총재정수요 (A)	물가지수 (P)	실질 재정수요		국민소득 (Y)	A/Y (%)
			(A/P)	연도별 비교		
1948년 ¹⁾	313.0	100	313	100	6,648	4.7
1949년	911.6	132	688	219	8,800	10.4
1950년	2,429.5	336	758	242	22,834	10.6
1951년	6,178.5	1,306	473	151	55,430	11.1
1952년	21,597.7	2,828	760	244	184,067	11.7
1953년 ²⁾	63,272.1	3,543	1,785	570	229,726	27.6
1954년 ³⁾ {12개월분}	111,847.4 {93,238.3}	5,088	2,195 {1,852}	701 {591}	337,168	33.1 {27.7}

주 1) 1948년도는 미군정 6개월 결산과 정부 수립 이후 6개월 결산을 합한 금액임

2) 1953년도는 최종예산으로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임

3) 1954년도 당초 예산으로 우리나라 회계연도는 1953년까지 당년도 4월 1일에서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였는데, 1954회계연도는 15개월(1954. 4. 1.~1955. 6. 30.)로 조정됐음

자료: 한국산업은행(1955), 「한국산업경제10년사」, pp.398~399

그리고 재정법 제4조에서는 ‘국가의 세출은 국채 또는 차입금 이외의 세입으로써 그 재원으로 하여야 한다’는 수지균형의 재정준칙을 천명했다. 당시에는 예산서와 결산서 이외에 별다른 재정통계가 작성되지 않았기에 재정규모와 재정수지의 개념과 수치는 공식적으로 확립되지 않았다. 더구나 1960년대 이후에는 경제개발계획 시대로 접어들며 정책결정자들의 관심은 재정지표의 개선 및 관리보다 거시경제지표 관리에 집중되기 시작했다. (다음 호에 계속)



Frida Kahlo, *The Two Fridas*, 1939,
Oil on Canvas, 173.5 X 173cm,
Museo de Arte Moderno, Mexico City

프리다 칼로의 예술혼과 남미의 혁명 시대

글. 최병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초빙교수, 『경제학자의 미술관』 저자



프리다 칼로(Frida Kahlo, 1907~1954년)란 이름은 그녀의 전기 영화인 <프리다>가 우리나라에서 개봉되기 전까지 그리 잘 알려져 있지 않았다. 그러나 영화를 본 많은 사람들은 경악과 찬탄 속에서 그녀의 삶과 예술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닫게 되었다.

프리다 칼로는 멕시코 코요아칸(Coyoacan)에서 멕시코 혁명(1910~1921년)이 일어나기 3년 전에 태어났다. 독일계였던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의 이름을 평화를 뜻하는 'Fried'라는 독일어에서 따와서 여성명사형으로 'Frida'라고 지었다. 그러나 이름과 달리 그녀의 삶은 고통과 좌절의 연속이었다. 그녀에게 일어난 두 가지 사건은 그녀로 하여금 비극적이지만 예술가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 하나는 열여덟 살에 당한 버스 충돌 사고였다. 그로 인해 척추를 고정하기 위해 석고 보정기를 착용하고 있어야 했다. 다른 하나는 그녀가 일생 동안 사랑했고 증오했던 그녀의 남편 디에고 리베라(Diego Rivera)를 만난 것이었다.

그녀는 사고를 당한 이후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그녀의 강렬하면서도 독특한 화법은 특히 초현실주의 화가들에게 호평을 받았다. 그러나 그녀는 초현실주의와는 거리가 멀었다. 왜냐하면 그녀는 자신의 내면세계 그 자체를 직설적으로 표출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보는 이에게는 낯설고 추상적 이미지로 전달됐다. 그만큼 그녀의 삶 자체와 그녀가 체험한 혹독한 고통은 일반 사람들이 경험하는 세계를 넘어서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의 그림을 보면 왠지 불편하다. 그녀의 자화상을 본 사람들은 그녀의 드러난 심장과 똑 똑 떨어지는 피에서 섬뜩함을 느끼며 그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어진다. 그녀의 강렬한 예술



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굳이 그녀의 그림을 벽에 걸고 싶지는 않은 것이다. 1920년대 중반부터 이십여 년간 프리다는 많은 자화상을 그리며 고통스러운 자신의 개인적인 기억과 체험을 캔버스 위에 표출했다. 그녀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두 명의 프리다(The Two Fridas)>(1939)를 보면 프리다의 행복했던 시절과 불행했던 시절을 극명하게 대비시킨 것을 알 수 있다. 그 행복과 불행의 원천은 다름 아닌 남편이었던 리베라였다. 오른쪽에는 프리다가 멕시코 전통의상을 입고 있으며 한 손에 남편의 어린 적 사진을 들고 있다. 그녀의 심장은 온전한 채로 있다. 하지만 왼쪽의 프리다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는데 그녀의 심장은 토막 나 있으며 동맥에서는 피가 떨어지고 있다. 프리다는 이 그림을 두고 자신의 페르소나(Persona)의 이중성을 보여준다고 술회하고 있다.

러시아에 불어닥친 러시아 혁명과 그 이후에 벌어진 러시아 공산주의 계파 간의 권력투쟁은 그녀의 인생에 새로운 전기를 제공하게 된다. 레닌(Vladimir Ilyich Lenin)의 급작스런 죽음으로 러시아에서는 권력을 쟁취하려는 암투가 피바람을 불렀고, 스탈린(Joseph Stalin)이 반대파인 트로츠키(Leon Trotsky)와 그의 추종자들에 대한 무자비한 숙청을 시작하자 트로츠키는 부득이하게 국외 망명을 선택했다. 오랜 망명 생활 끝에 트로츠키는 멕시코에 정착하게 되는데, 그가 멕시코에 오기까지 프리다의 남편이었던 리베라의 적극적인 역할이 컸다. 트로츠키와 함께 러시아에서부터 불어온 혁명의 기운은 멕시코에도 번지게 되어 포르피리오 디아스(Porfirio Diaz)의 독재 정권이 반란군에 의해 무너진 멕시코 혁명의 발단

이 되었다.

볼세비키 혁명의 기운은 남아메리카 지역에서 스페인의 지배로부터 독립하려는 저항운동에 영향을 주었고 식민주의 타파를 위한 독립운동은 혁명으로 이어지게 된다.(지금까지도 제3세계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체 게바라(Che Guevara)의 혁명정신은 전 세계의 젊은이들에게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다.) 남미 각 지역에서는 혁명의 기운이 넘치고 있었지만, 반면에 북아메리카에서는 미국의 영국으로부터의 독립 이후에는 멕시코와의 전쟁 이외에 별다른 혁명의 움직임은 없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경제사적인 질문은 왜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는 유럽의 식민 종주국으로부터 독립하면서 북반부에서는 비교적 안정적인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가 정립되었으나 남반부에서는 혁명과 사회주의 운동이 휘몰아치면서 정치적,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사회체제로 나아가게 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이에 대해서 체계적인 이론을 정립한 학자가 바로 니얼 퍼거슨(Niall Ferguson)이다. 퍼거슨은 재산권 같은 키워드로 북아메리카가 남아메리카에 비해서 어떻게 월등하게 발전할 수 있었는지를 설명한다. 스페인 식민지에서는 모든 토지가 왕의 소유였지만, 북미 영국식민지에서는 최하층민에게도 토지를 소유할 기회가 주어졌다.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100년 안에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에 기초해서 민주적 제도를 정착시키고 가장 부유한 국가로 발전했으나, 남쪽의 혁명은 200년 동안 대륙 전체를 분열과 불안정 저개발의 구렁텅이에 빠뜨렸다. 남아메리카의 조지 워싱턴인 시몬 볼리바르(Simon Bolivar)는 결국 남아메리카합중국을 세우는 데 실패했다.

150여 점에 이르는 프리다 칼로의 전작(全作)은 투쟁의 연속이었던 그녀의 인생을 보여준다. 대중적인 멕시코의 전통 회화 양식으로 그린 그녀의 그림들은 유럽의 고전 회화와 아방가르드 미술부터 프리다와 리베라가 지지했던 공산주의까지 모두 아우르고 있다. 아이를 유산하고 평생 자녀를 갖지 못했던 프리다. 그녀에겐 그림만이 그녀를 위로하는 친구였다. 그러나 그녀는 불꽃 같은 삶 속에서 자신의 작품으로 그녀만의 아이를 낳은 것은 아닐까? 그녀의 삶에 대한, 사랑에 대한, 그림에 대한 열정은 그녀를 불멸 화가의 반열에 올려놓았다.

영화 <프리다>의 마지막 장면에 나오는 프리다의 유언과도 같은 구절은 마치 나병(癩病)을 안고 평생을 살았던 시인 천상병의 마지막 독백을 연상시킨다.

“나의 마지막 외출이 즐겁기를
그래서 다시 돌아오지 않기를”

질서 자유 주의의

창시자

글. 민경국 강원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현재 자유주의연구회 회장

Walter Eucken

발터 오이켄 1891~1950





빈곤 문제는 경제적 자유를 억압한 탓

발터 오이켄(Walter Eucken, 1891~1950년)은 아버지가 노벨문학상을 받은 철학 교수였고 어머니가 화가였던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 문화와 예술에 관심이 깊은 개방적인 분위기에서 성장했다. 이것이 그가 장차 교수로서 용기와 책임의식이 강한 인물이 되는 데 영향을 미쳤다.

오이켄이 살았던 시기인 1917년은 처참했던 소련의 볼셰비키 혁명과 두 차례의 세계대전, 히틀러의 나치즘 등으로 인류역사상 가장 잔혹한 시기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대학의 지식층은 독재자와 전체주의의 시류에 영합하는 등 도덕적 파산이 만연했다. 이런 상황에서 그는 조만간 망할 것이 틀림없는 나치정권 이후에 독일이 지향해야 할 경제질서를 새로이 창안했다.

그 질서는 자유와 변형을 동시에 달성하는 질서, 즉 질서자유주의였다. 자유가 없이는 인간

그의 사상에서 흥미로운 것은 시장경제와 정부 정책에 대한 비전이다. 그에게 자본주의는 자유와 변형의 원천이다. 자유기업이 없이는 혁신도 없다. 빈곤의 문제는 자유가 없기 때문에 야기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규제를 풀고 경제자유를 확립하는 것이 빈곤을 해결하는 지름길이라고 역설했다.

의 존엄성도 있을 수 없기에 전체주의의 폭정으로 잃어버린 자유에 대한 독일인들의 갈망을 대변했다. 새로운 경제질서는 경제적으로도 변형이 가능해야 했다.

그의 사상에서 흥미로운 것은 시장경제와 정부 정책에 대한 비전이다. 그에게 자본주의는 자유와 변형의 원천이다. 자유기업이 없이는 혁신도 없다. 빈곤의 문제는 자유가 없기 때문에 야기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규제를 풀고 경제자유

를 확립하는 것이 빈곤을 해결하는 지름길이라고 역설했다. 경쟁질서만이 정치적 권력이든 사적 권력이든 권력을 억제하는 불가피한 장치라는 것도 강조했다.

과정정책 대신에 질서정책을!

오이켄은 '질서정책'이라는 아주 새로운 정책비전을 제시했다. 그것은 시장참여자들이 자유로이 활동할 수 있는 법적 틀(질서)을 마련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이는 사적소유, 책임, 계약의 자유, 열린 시장, 건전한 통화 등 '시장경제 원칙'에 따르는 정책이다. 이런 정책을 통한 법질서가 뒷받침될 때 비로소 시장경제가 자유와 번영을 보장한다. 질서정책과 엄격히 구분되는 '과정정책', 즉 재량적인 정책은 정부가 복지, 투자, 분배, 고용 등과 같이 국가의 특정한 목표를 위해 사안별로 시장과정에 개입하여 자유를 침해

19세기 이래 자본주의는
봉건시대의 억압적인 신분 사회로부터
해방시켜, 개인의 삶을 개선했고
삶의 기회도 확대했다.
그러나 그는 자본주의에는
결함이 있다고 했다.
'독점'과 담합의 형태로 사적 권력이
등장하여 이것이 자유를 억압하고
소득과 부의 분배의 격차를
심화시켰다고 주장했다.

하는 간섭이다. 오이켄은 간섭이 빈곤과 실업이라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다고 경고했다. 흥미로운 것은 오이켄의 역사관이다. 19세기 이래 자본주의는 봉건시대의 억압적인 신분 사회로부터 해방시켜, 개인의 삶을 개선했고 삶의 기회도 확대했다. 그러나 그는 자본주의에는 결함이 있다고 했다. '독점'과 담합의 형태로 사적 권



력이 등장하여 이것이 자유를 억압하고 소득과 부의 분배의 격차를 심화시켰다고 주장했다. 주목할 것은 그런 사적 권력의 원인이다.

오이켄은 사적 권력의 형성을 법적으로 인정하거나 지원하는 등, 정부의 잘못도 컸지만, 정부의 개입이 없었다고 해도 경쟁을 제한하는 독점과 담합이 필연적이라고 했다. 이는 시장경제가 정부의 도움이 없이는 자생적으로 자유경쟁이 확립될 수 없고 그래서 경쟁질서의 확립은 국가의 중요한 과제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그는 정부의 필요한 규제는 엄격히 제한되고 사후적이어야 한다는 점을 결코 잊지 않았다.

어쨌든 그의 질서자유주의는 별도의 독점금지 정책이 필요하지 않다고 강조하는 고전적 자유주의와 다르다. 이는 독점과 담합의 문제는 지속적인 국가의 시장개입에서 야기된 산물이라고 말하면서 기업의 시장 진입에 법적 장애물이 없으면 사적 권력은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오이켄의 정부관(觀)도 흥미롭다. 그는 ‘강한’ 그리고 ‘제한된’ 정부를 강조했다. 한편으로 정부는 사적 권력의 남용으로부터 자유경쟁을 보호할 과제가 있다. 이익단체의 요구를 물리칠 만큼 정부는 강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 정부는 개인과 기업의 자유를 위협하기 때문에 권력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시장경제 원칙으로 정부행동을 구속해야 한다고 한다. 오이켄의 경제사상은 독일에서 당시 무시됐던 자유와 질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자유주의 경제학의 선구자가 되었다.

오이켄은 사회주의가 자유를 박탈하는 그래서 총체적으로 실패한 이념이라고 믿었다. 적자재

정, 저금리, 신용확대를 통한 케인스의 완전고용정책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가격을 왜곡시켜 불황을 몰고 온다고 경고했다.

나치즘 치하에서도 오이켄은 자신이 재직하고 있었던 프라이브르크 대학 근처의 지하방에서 비밀리에 교수들 및 대학원생들과 함께 법과 경제, 질서사상과 관련하여 정기적으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세미나 소식이 암암리에 알려지자 독일 전 지역에서 참석자들이 몰려왔다. 그러나 비밀경찰의 수색과 압수, 감금 등으로 세미나를 지속하지 못했다.

사상의 힘

오이켄의 사상은 오늘날 독일의 자유주의 경제학의 구심점이 되어 생생히 살아있다. 그것은 제도적 틀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는 질서정책의 르네상스를 열었다. 오이켄의 사상이 한국에 미친 영향은 각별하다. 한국에서는 과거에 지나친 정부의 개입으로 왜곡된 경쟁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1980년대 초에 도입된 독과점 규제법의 뿌리는 오이켄의 경쟁질서 개념이다.

한국질서경제학회(Ordo Economics Association)가 1990년대 중반에 설립되었는데 그 설립배경에도 오이켄의 질서사상이 있다. 다양한 이유로 질서경제학과는 관련이 없는 활동이 많았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과정정책(재량정책)을 의미하는 한국적 경제민주화를 배경하기 위한 학회 차원의 노력처럼 학회를 중심으로 질서사상을 연구하고 이를 현실에 접목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모습은 매우 바람직하다.

Financial *Calendar*

2021 **03**月 March

- **재정**
 - 2022년 예산안 편성지침 통보 (기획재정부→각 중앙관서)
- **경제**
 - 한국은행 2020년 4/4분기 국민계정 (잠정) 발표
- **국제**
 - OECD 중간경제전망(Interim Economic Outlook) 발표

January

01

재정

- 2022년 중기사업계획서 제출 (각 중앙관서→기획재정부)

경제

- 통계청 2020년 연간 고용동향 발표
- 한국은행 2020년 4/4분기 및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 발표

국제

- 세계은행(WB) 세계경제전망 발표
- IMF 수정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발표

February

02

재정

- 2020년 총세입·총세출 마감
- 2020년 결산보고서 제출 (각 중앙관서→기획재정부)

경제

- 통계청 2020년 4/4분기 가계동향조사 (소득 부문) 결과 발표

March

03

재정

- 2022년 예산안 편성지침 통보 (기획재정부→각 중앙관서)

경제

- 한국은행 2020년 4/4분기 국민계정 (잠정) 발표

국제

- OECD 중간경제전망(Interim Economic Outlook) 발표

July

07

August

08

재정

- 2022년 국유재산종합계획 제출

경제

- 통계청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발표
- 통계청 2021년 2/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발표

September

09

재정

- 2022년 예산안 제출(정부→국회)
-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발표

경제

- 한국은행 2021년 2/4분기 국민계정(잠정) 발표

국제

- OECD 중간경제전망(Interim Economic Outlook) 발표

□ 통계청 2020년 4/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발표(통계청, 2.18.)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16만 1천원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1.8% 증가, 가계지출은 389만 2천원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0.1% 감소했으며, 처분가능소득은 417만 5천원(전년 동분기 대비 2.3% 증가), 흑자액은 126만 9천원(전년 동분기 대비 8.2% 증가)으로 나타남

□ 기획재정부 2020년 말 대외채무 동향 및 평가(기획재정부, 2.19.)

- 2020년 말 대외채무는 5,424억불로 전년 말 대비 755억불 증가, 대외채권은 10,207억불로 전년 말 대비 731억불 증가했으며, 순대외채권은 4,782억불로 전년 말 대비 24억불 감소

□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기획재정부, 3.2.)

- 정부는 ① 피해계층 긴급지원금 ② 긴급 고용대책 ③ 백신구입 등 방역대책 3가지 목적으로 9.9조원의 국채 발행과 5.1조원의 가용재원(특별회계 세계잉여금, 한은잉여금, 기금재원) 등의 재원을 조달하여 15.0조원의 추경 편성을 통해 총 19.5조원의 '4차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마련(추경 15.0조원, 기정예산 4.5조원)

April

04

재정

- 2020년 결산감사 의뢰
(기획재정부→감사원)

국제

- IMF 세계경제전망보고서(World Economic Outlook Report) 발표

May

05

재정

- 2022년 예산요구서 제출(각 중앙관서→기획재정부)
- 2020년 국가결산보고서 제출(정부→국회)
- 2020년 기금운용평가결과 발표
- 2020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발간
- 2021년 국가재정전략회의 개최

경제

- 통계청 2020년 가계동향조사(지출 부문) 결과 발표
- 통계청 2021년 1/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발표

June

06

경제

- 한국은행 2021년 1/4분기 국민계정(잠정) 발표
- 기획재정부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국제

- OECD 경제전망보고서(Economic Outlook) 발표
- 세계은행(WB) 세계경제전망 발표
- IMF 수정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발표

October

10

국제

- IMF 세계경제전망보고서(World Economic Outlook Report) 발표

November

11

경제

- 통계청 2021년 3/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발표

국제

- OECD 경제전망보고서(Economic Outlook) 발표

December

12

재정

- 2022년 예산안 국회 심의의결
- 2022년 예산 확정

경제

- 기획재정부 2022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 한국은행 2021년 3/4분기 국민계정(잠정) 발표



우리나라 재정시스템(FMIS)을 더 똑똑하게 하고
시스템에 축적된 재정정보를 반듯하게 분석함으로써

‘함께 가고, 오래 가는 재정’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지난해 한국재정정보원이 수행한 연구분석 보고서 주제들은 △재정시스템 개선 △재정통계 정비 △재정정보 연계 △재정집행 특성 등에 관한 것들입니다. 성과관리 개선 등 일부는 정부 정책에 반영되기도 했고, 일부는 시스템 개선이나 통계정비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유일한 대중 상대 재정월간지인 『나라재정』은 코로나19 대응 재정정책, 나라살림 현황, 국내외 재정전망 등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확장재정 과정에서 분출된 여러 재정담론을 소개하는 공론의 장 역할도 일부 수행하려고 애썼습니다.

어려운 재정통계를 쉽게 가공한 △통계집 △해설서 △시각물 등도 제작·배포했습니다. 특히 1,500여 쪽에 이르는 방대한 국가결산보고서를 14쪽으로 요약하고 웹툰으로 만들어, ‘읽히는 결산서’를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연차보고서에 소개된 △보고서·통계집 배포 △내용 설명 요구 △월간지 무료구독 △시각물의 활용 등 모든 문의를 환영합니다.



2020년 주요 연구·분석 보고서

- 01 주요 재정사업의 집행 특성과 재정관리의 시사점
- 02 재정의 자동안정화장치와 경기조정
- 03 dBrain 기반 재정성과관리 지원 강화 방안
- 04 중앙과 지방교육 재정정보를 활용한 정부 기능별 통계 산출방안
- 05 「데이터기반행정법」시대, 재정통계 연계·활용을 위한 제언
- 06 재정정보관리시스템 연계를 위한 법제 및 거버넌스 체계 개편 대안
- 07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주요국 정책사례 연구
- 08 재정사업 시계열자료 구축을 위한 분류체계 분석



애독자 코너

독자와 함께 만들어가는 월간 <나라재정>은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라재정> 사진인증 이벤트

월간 <나라재정> 책자를 즐겁게 읽으셨다면
책자를 사진으로 찍어 보내주세요.
사진과 함께 간단한 느낀 점을 적어 보내주신
분들을 선정하여 커피쿠폰을 보내드립니다.

사진인증 및 독자편지 보내주실 곳

이메일 narajaejung@kpfis.or.kr

응모 기간 2021. 3. 26 ~ 4. 11.



월간 <나라재정>은 개인 구독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narajaejung@kpfis.or.kr로 메일 주세요.



한국재정정보원은
국가 재정의 밝은 내일을 위해
재정정보화를 이끌어갑니다.



한국재정정보원
Korea Public Finance Information Service

(04637)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0, 메트로타워
Tel 02-6273-0500 Fax 02-6312-8959 www.kpfis.or.kr

